

2006

연구보고서 요약집



연구보고서 / Policy Analyses

-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시사점
-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분석
-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
-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 지역무역협정(RTA)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 From East Asian FTAs to an EAFTA: Typology of East Asian FTAs and Implications for an EAFTA
- Global Imbalance and its Implications on East Asian Economies

세미나자료 모음

- Africa in the World Economy: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Challenges
- Global Imbalances and the US Debt Problem: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 Emerging Financial Risks in East Asia

연구자료 / 정책자료

-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 몽골 경제와 한·몽골 경제협력 확대방향
-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과 경제협력 확대방안
- 중국 방송산업 현황과 진출전략 : TV 시장과 규제를 중심으로
- 일본의 적대적 M&A 방어지침과 시사점
- Prospects for Regional Financial and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Working Papers

- Investment Stagnation in East Asia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Growth
- Does FDI Mode of Entry Matter for 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Property and Perspective

APEC Study Series

- Cooperation among APEC Member Economie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Economic and Cultural Perspectives
- Evaluation of Investment Liberalization Efforts by APEC Economies

동북아연구 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s in Korea and Japan

-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China-Korea FTA

지역연구시리즈 / 지역리포트 / 지역연구회 시리즈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제도적 접근
- 아프리카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향: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 The Success Story of Switzerland: How Could Switzerland's Specific Political Institutions Contribute to the Country's Political Stability and Economic Wealth

단행본

- 한·미 FTA 바로 알기 2006



연구보고서 / Policy Analyses

선진통상국가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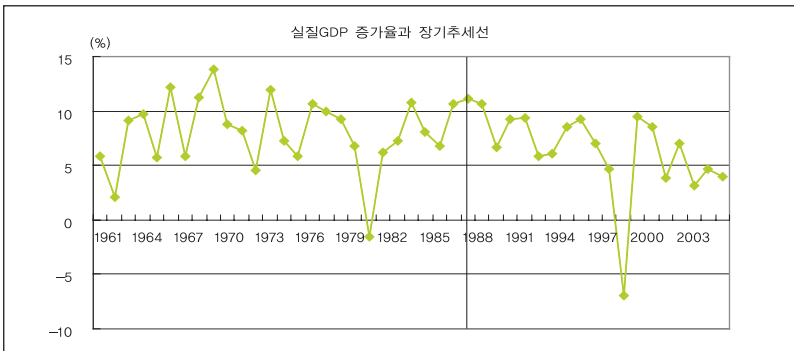
채 욱 · 김세원 · 유재원 외 (2006. 12)

ISBN 978-89-322-1248-7 / A5/267면
10,000원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 세계화의 진전,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민주화의 진전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민주화세력에서 참여화세력으로 사회변화의 주도세력이 바뀌었으며, 시민단체가 능동적 여론주도자로 부상한 한편 정부는 의사결정자에서 조정자로 역할이 바뀌고 있다. 기업 역시 이윤극대화에 그치지 않고 혁신을 주도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증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패러다임, 즉 경제의 기본 여건과 구조는 생활패턴의 변화, 대외환경의 변화, 지배구조의 변화, 시장구조의 변화간의 상호작용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새로운 관행, 제도 및 정책대응을 요구한다.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부진은 경제주체들이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제성장률의 저하는 투자의 부진 및 부문간 기술격차 확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다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 뒤에는 구조개혁의 지연과 투자환경 악화, 저조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신기술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의 지연, 이해갈등의 확산과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이 성장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장기 세계통상환경 전망

통상환경 변화는 한국경제의 대외거래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선의 대비와 현명한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향후 중장기 통상환경에서 예의 주시할 요소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DDA 협상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지속될 것이며,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체제 역시 중장기적으로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체제변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둘째, EU, NAFTA, MERCOSUR, AFTA를 근간으로 소규모의 새로운 FTA의 체결이 증가하면서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주의의 확산은 그 자체로써 무역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WTO의 다자체제로 하여금 지역무역협정 수준 이상의 자유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역할분담이 예상된다. 셋째, 일본을 정점으로 하던 동아시아의 무역질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재빠르게 개편되면서 양국간 패권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양국간 상호의존도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공생관계가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BRICs를 비롯한 개도국 경제권의 빠른 성장은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한 개방우호적인 통상환경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제통상협상에서는 이들 개도국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다. 다섯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로 대표되는 세계경제의 경상수지 불균형문제는 통상관계의 악화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따라서 미국이 경상수지 흑자국에 대하여 공격적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과 달러화 약세에 따른 세계금융질서 교란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상당기간 원유를 비롯한 국제에너지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되며, 이는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은 유가상승충격을 완화 강세로 상쇄해왔지만, 고유가행진이 계속될 경우 이러한 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통상정책의 평가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통해 협소한 국내 시장의 제약요건을 효과적으로 극복한 데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해외시장을 겨냥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가 보호주의장벽 및 금융·조세지원을 적극 제공하는 형태를 지닌다.

한국경제의 산업화 과정에서 통상정책은 산업정책과 더불어 고도성장을 위한 전략의 양대 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해왔다. 즉 1980년대 이전까지는 수출을 위한 국내 산업의 역량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성장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중상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통상정책은 더 이상 타당성을 갖기 힘들어졌고, 변화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1990년대에는 UR 협상의 타결, OECD 가입, 외환위기 및 지역주의(FTA)의 확산 등과 같이 한국경제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효과적 통상정책의 수행을 통해 이를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경우 통상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함에 따라 협상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것이다.

통상정책 관련 주요 이슈별 성과를 살펴보더라도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통상정책이 체계적으로 진전되지 못했으며,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통상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사회적인 합의는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통로를 갖추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대외협상에 못지않게 국내에서의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확고한 정책기조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이 없이는 효과적인 통상정책 추진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국 산업의 이익과 피해계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가 높아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통상정책은 대내정책인 동시에 대외정책으로서의 복합성이 더욱 높아져갈 것이며, 통상정책의 범위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에 따라 상대국의 입장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통상규범의 대상기구 및 국가에 따라 규범의 강도가 달라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선진경제 실현을 위한 지속적 성장조건

한국의 장기적 비전은 선진경제의 구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 성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지속적 성장은 과거 고도성장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꾸준한 성장궤도를 유지함으로써 안정과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경제로의 이행, 성장진화적 분배구조의 정착,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혁신경제로의 이행이란 기존의 요소 투입과 선진기술의 이전 대신 혁신적인 제품생산 역량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경제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진기술을 흡수하고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업화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는 것으로, 이를 위한 3대 요소로서 경쟁, 인프라,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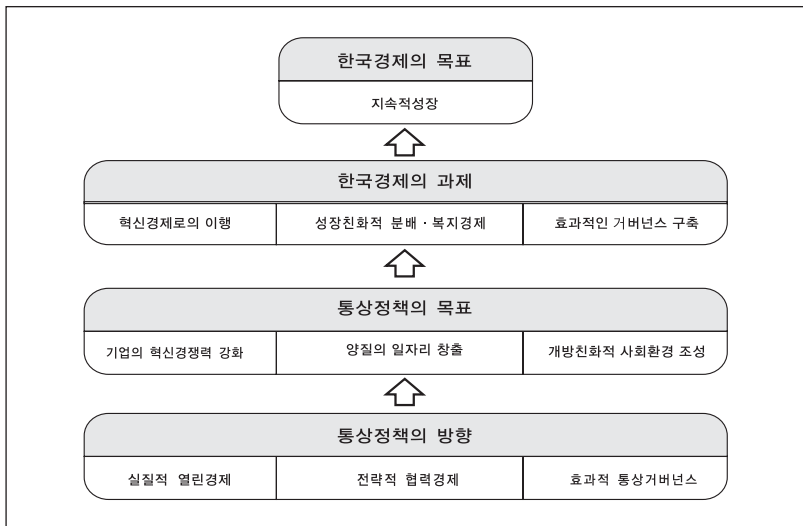
과도한 분배·복지 정책과 마찬가지로, 미흡한 분배·복지 정책 역시 지속적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 성장과 조화를 이루는 분배·복지 체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핵심이 되어야 하며, 소득수준에 부합하는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권한 행사와 관련된 제도 및 관행’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최근 경제성장의 기초여건으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

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적절히 수립, 이행, 강제되어야 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이 안정된 법규제의 틀 안에서 융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통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진경제의 구현을 위한 지속적 성장이라 할 수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위한 통상정책의 목표로서 기업혁신경쟁력의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개방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등을 설정했다(그림 참고).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은 실질적 열린경제, 전략적 협력경제, 효과적 통상거버넌스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들은 곧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3대 통상전략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 열린경제를 위해서는 한국은 외국의 상품, 서비스, 자본, 기술에 대한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효과적 시장경제를 지향하여야 한다. 실질적 열린경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최선의

환경제공이자, 경쟁주체들의 핵심역량에 기초한 수준 높은 경쟁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 열린경제의 달성은 국내 기업의 혁신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한국기업들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략적 협력경제란 경쟁촉진을 위한 국가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서로간 보완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자유교역의 이득을 최대한 창출하고 이를 공유하는 윈-윈체제의 구축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제분업의 심화를 위해서는 WTO와 지역주의를 활용한 시장접근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생산요소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개도국 협력관계의 강화를 통해 이들 개도국들의 성장잠재력 실현을 돕는 동시에 이점을 심분 활용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한편 통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통상정책결정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조정시스템의 구축,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의 부여, 투명성 제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기밀 유지간의 균형 제고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한국통상정책의 3대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0대 실천과제와 30대 실행계획을 요약 정리했다.

3대 전략	10대 핵심 실천과제	30대 실행계획
실질적 열린경제	시장개방 확대를 통한 경쟁 촉진	· 서비스시장 개방예시제 실시
		· 전략 서비스산업의 수출산업화
		· 관세체계의 효율성 제고
	한국경제 투자친화도의 제고	· 투자환경 개선작업의 고도화
		· 경제특구의 국제경쟁력 제고
		· 한국경제 흡인력 강화 프로그램 수행
	금융허브와 역외금융시장 육성	· 역외금융시장 육성
		· 금융규제 및 감독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보
		· 국제금융특구 설립
	혁신적 지식역량의 국제화	·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
		· 글로벌 연구개발기능 유치
		· 외국 고급인력의 유치

3대 전략	10대 핵심 실천과제	30대 실행계획
전략적 협력경제	시장확대를 위한 적극적 무역정책 전개	· 수준 높은 FTA 추진
		· FTA 로드맵의 체계화
		· WTO 체제의 대외지향적 활용
	개발도상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	· 공적개발원조(ODA)의 확대와 선진적 운용
		· 특혜관세제도의 확대
		·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 정책체계 확립
	지역협력의 전략적 활용	· 동북아경제협력의 중점적 추진
		· 지역협력기구의 실용적 관리
		· 남북한 자유무역의 확대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	·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및 지원 확대
		· 전략적 자원외교 강화
		· 에너지자원 수입선 다변화
효과적 통상 거버넌스	개방친화적 통상인프라 구축	· 통상진흥 공공교육 · 홍보프로그램 운영
		· 종합적 무역조정지원제도 구축
	통상정책 결정 및 운영체제 효율화	· 정부 부처간 통상조정 권한의 강화
		· 행정부와 국회간의 통상교섭 협력절차 확립
		·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
		· 기업활동지원형 통상정책시스템 구축

통상전략의 우선순위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30대 실행계획은 중장기 전략인 만큼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 우선순위를 고려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용이도, 시급도,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들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리해보았다. 이들 3가지 기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은 기여도라고 할 수 있다. 즉 해당 실행계획이 통상목표, 나아가 한국경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대 전략별 기여도는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실질적 열린경제에서는 ‘투자환경 개선작업의 고도화’, ‘금융규제 및 감독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보’,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 순으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협력경제에서는 ‘전략적 자원외교 강화’,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및 지원 확대’, ‘수준 높은 FTA 추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효과적 통상거버넌스에서는 ‘종합적 무역조정지원제도 구축’, ‘기업활동지원형 통상정책시스템 구축’, ‘정부 부처간 통상조정권한의 강화’가 높은 기여도를 나타냈다.

시급도 측면에서는 ‘투자환경 개선작업의 고도화’, ‘전략적 자원외교 강화’, ‘금융규제 및 감독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보’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기여도와 시급도간 연관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 ‘FTA 로드맵의 체계화’와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 정책 체계 확립’,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및 지원 확대’, ‘종합적 무역조정지원제도 구축’, ‘정부 부처간 통상조정권한의 강화’ 등도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용이도의 경우 기여도나 시급도에 비하여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행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비교적 용이한 과제로는 ‘통상진흥 공공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과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 정책체계 확립’이 지적되었다.

종합하면, 중장기 통상전략은 기여도가 높은 것부터, 그 다음에는 시급도가 높은 것부터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에는 ‘투자환경 개선작업의 고도화’, ‘금융규제 및 감독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보’, 그리고 ‘전략적 자원외교 강화’가 해당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전략이라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유효성이 달라지는 만큼,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통상전략의 유효성을 확보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비전과 통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둘째, 통상정책의 성취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개선에 활용해야 하며, 셋째, 대외협상과 대내협상간의 상호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시사점

김홍중 · 신정완 · 이상호 (2005, 12)

ISBN 978-89-322-1247-0/A5/242면
10,000원

최근 한국경제는 세계화, 양극화 등 대내외적인 도전과 함께 고용없는 성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회정책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국가 운영의 추진도구인 정책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로운 결합방안과 합의의 도출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해본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스웨덴은 적극적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로운 결합을 추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국가이다. 스웨덴은 2차대전 이후 황금시기에 케인즈주의적 거시경제정책과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결합시켜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세계 최고수준의 복지국가를 달성하였다. 스웨덴 모형은 사민당과 중앙교섭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하에 설계주의적으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체제였기 때문에 정책적 보완성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스웨덴 모형을 구성하는 정책요소들간의 긴장은 1970년대 이후 불리해진 정치경제적 여건하에서 '정책간 충돌'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스웨덴정부는 물가안정에 기초한 건전한 경제성장을 지향한다는 목표 아래 긴축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사회정책 역시 거시경제정책 기조에 맞게 지출삭감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사회정책의 운영 틀에서도 시장주의적 요

소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스웨덴정부는 사회정책의 프로그램별로 개혁의 완급을 조절하고 최빈곤층을 위한 배려를 통해 ‘복지축소의 정치’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한 개혁 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사회적 합의주의 전통에 입각하여 개혁을 추진한 것도 개혁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영국은 복지국가체제의 대표적 국가에서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로 급진적 전환을 경험한 국가로서, 전후 5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영국 복지국가의 형성과 쇠퇴는 영국 사회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고리 중의 하나이다. 케인즈적 전통과 냉전시기의 특수성이 맞물린 복지국가의 확대는 전후 영국사회를 규정짓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였다. 고도성장이 지속되던 1960년대 중반까지의 ‘황금기’에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는 자연스럽게 달성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 대외개방과 국제수지의 방어, 케인즈주의 총수요관리정책, 단체 협약 및 보편적 사회정책은 내부적으로 긴장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부조화 관계는 1970년대 들어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다. 이를 극복한 대처의 개혁정책은 영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개조계획이었으며 그 이론적 배경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효율성의 제고였다. 하지만 대처의 보수당 정권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반드시 대립한 것만은 아니었다. 대처 정부의 사회정책 개혁은 전통적 사회복지 부문이 아닌 교육과 공공주택 분야 및 지방정부의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대처 시절의 이러한 사회정책의 궤적은 핵심적 사회정책 분야에 대한 개혁 대신 범사회정책에 대한 개혁을 통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를 이끌어낸 정책간 타협안의 산물이었다. 블레어 신노동당 정부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는 사회정책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조화로 표현되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인력정책은 사회정책의 많은 부분에서 강조되었다. 결국 블레어 신노동당 정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간 조화의 문제를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사회경제정책의 집행으로 치환시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정책에서도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정책이 주로 빈곤대책으로 집중된 미국의 경험은 앞에서 살펴본 유럽의 경우와는 다른 사회정책의 발전과정을 겪었다. 미국에서는 자유주의의 전통이 강하였으며 케인즈주의 정책조차도 시장이나 민간부문에 대한 간접적인 개입으로 나타났다. 미국도 1980년대 이후 공급측 경제학의 영향을 받아 탈규제와 자유화가 더 진전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나타나지만, 케인즈주의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1950~60년대에도 미국의 사회정책은 시장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시장 중심의 사회경제구조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간 조화의 문제는 결국 경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얼마나 강조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이 빈곤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빈민층에 대한 공교육의 확충에 많은 역점을 둔 것은, 결국 비시장적 영역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빈곤층에 대한 공적 부조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미국은 교육을 통한 개인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의 핵심적 사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는 경제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시장화를 통해 달성되었으며, 미국적 사회정책은 이러한 기반위에서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례 연구가 한국사회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간 조화 및 합의의 도출을 보는 기본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첫째, 성장과 분배의 상충가능성은 사회경제정책의 본질적 특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에서 나온다. 따라서 사회정책을 희생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경제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는 단순히 양 정책간 조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대외정책, 대외관계와의 조화 속에서 폭넓게 조망되어야 한다. 셋째, 시장친화적 사회정책이 반드시 효율적이고 성과가 뛰어난 것은 아니며, 사회지출은 본래 스스로 계속 증가하는 성격을 갖고 있음에 유

의해야 한다. 넷째, 합의의 도출은 세력들간 합의의 도출만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정부와 사회구성원이 어떠한 개혁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회경제체제가 조합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합의’는 가능하다.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과 관련하여, 첫째, 경제정책은 전통적인 사회정책적 과제까지도 어느 정도 감당하는 경제정책, 즉 ‘사회적 경제정책’이 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정책 또한 ‘사회학습망’과 ‘고용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 친화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간의 상충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사회정책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비시장적 공적 부조와 실업, 장애, 의료, 연금 등 사회보험 분야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반면 범사회정책 분야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위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양 정책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블레어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보적 관계를 중시했으며, 국가경쟁력이라는 중간 매개를 통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은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넷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간의 조화 또는 충돌과 함께 경제정책들간의 충돌 및 사회정책 내부의 정책적 모순과 충돌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양 정책간 충돌이 실제로는 정책 내부의 부조화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집행 및 전달의 방식과 관련하여 사례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정책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난관에 봉착하여 단기적 미봉책으로 버티거나 비난회피 전략에 의존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어렵더라도 정책의 목표와 추진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가능한 한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논의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의 결과에 대해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책임을 공유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토론민주주의’ 또는 ‘숙의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함으로써 사회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합의의 도출을 위해서는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정책에서 제공되는 재화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한 정부의 적극적 홍보도 중요하다.

정책추진의 재원은 대부분 국민의 경제활동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와 이에 대응하려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중요한 해결사항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의 시사점은 첫째, 사회정책은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수혜자가 되는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 사회서비스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감으로써 조세 부담층이 사회정책의 혜택을 실감하면 합의의 도출은 쉽게 달성될 수 있다. 둘째, 세정의 선진화와 조세정의의 실현은 조세저항을 줄이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셋째, 사회정책을 위한 자원조달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의 예산지출구조를 주어진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겨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권 울 · 김한성 · 박복영 · 황주성 · 홍수연 (2006. 12)

ISBN 978-89-322-1249-4 / A5 / 257면
10,000원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선언이 채택되었다. 특히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파트너십 강화와 공동노력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주요 선진국의 ODA 정책방향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개혁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밀레니엄 개발목표(MDG)가 설정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개도국의 빈곤퇴치에 초점을 두고 MDG를 실현하기 위해 ODA 배증계획은 물론 결과중심의 사업관리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세계화 추세에서 낙오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원조정책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난 15년간 7배 이상 증가하여 2004년에는 4.2억 달러에 이르렀고, 2005년의 경우 7.5억 달러를 넘어서 국민총소득(GNI) 대비 0.1% 까지 급증하였다. ODA 규모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원조 공여국 중 18위를 차지하고 있고, 일부 DAC 회원국보다 더 큰 규모의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ODA의 양적 규모 확대면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조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원조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對)개도국 원조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외원조정책의 전략적인 운용과 선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ODA/GNI 비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평균 0.33%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세계 12위의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고, 중장기 국제협력전략에 근거한 체계적인 ODA 운용을 위해서도 다양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빈곤퇴치를 국가목표로 삼아 한국의 빈곤퇴치와 개발경험 이전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ODA 정책의 선진화와 운용체제 개혁이 당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개발협력에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빈곤문제는 그 자체가 매우 복잡한 사회적 현상으로서 구조적이고 다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ODA를 통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 긴급구호와 같은 인도주의적 원조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고, 개도국의 자조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원조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과정에서 선진국으로부터 막대한 ODA를 받아 바 있고, 지난 40여년간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

로 부상하면서 경제 및 무역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진입하였다.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에는 경제·사회제도 및 정책 운용의 선진화를 이룩하여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중간자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향해 매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선진형 통상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분담과 공헌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며,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근 국제개발협력 추세와 대내적 여건을 고려하여 ODA 중장기 비전 및 운용전략을 연구함으로써 체계적인 ODA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UN 밀레니엄 개발선언에 명시된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에 책임을 공유하고, 개발원조가 무역 및 투자와 연계돼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특히 개도국에 대한 원조정책의 개혁과제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의 원조정책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원조사업 시행과정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ODA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의 비교우위 및 개발경험에 기초한 한국형 원조모델 정립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경제발전 및 개방경험을 토대로 한 개발건설팅과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한 제도기반 확충사업을 중점 지원하는 등 개도국의 창조적 잠재력이 개발되도록 개도국의 능력배양사업 확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운용방안을 담은 정책문서 발간, ODA 중기정책 공표, 국별 원조전략 작성이라는 3단계를 통하여 원조정책의 안정적 운용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원조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와 평가를 통한 원조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국제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결과중심의 평가체제가 구축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모니터링과 평가체제가 통

합적으로 구축되어 사업 운영 및 관리 체제가 보다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민간부문과의 개발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비정부기구(NGO), 기업, 대학, 지자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참여형 원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민간부문의 폭넓은 참여를 기반으로 ODA 인식 제고를 위한 개발교육과 개도국 지원 홍보활동 강화는 국민참여형 원조정책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서진교 · 송백훈 · 송영관 · 정지원 · 이창수 (2006, 12)

ISBN 978-89-322-1250-0/A5/182면
10,000원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 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 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의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 이후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일부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중에는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와 서비스분야 전체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울러 2007년 말까지 DDA를 종결하기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2007년 2월 말을 전후해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은 2007년 3월까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2007년 3월 말 세부원칙이 합의 · 도출된다면, 또는 비록 완벽한 형태의 세부원칙은 아니더라도 주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세부원칙이 마련된다면,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의 시한연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2007년 말 DDA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DDA 진행 추이를 감안할 때 2007년 3월까지의 협상을 통해 그 동안 첨예한 입장대립을 보여왔던 주요국들이 세부원칙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세부원칙 도출의 관건인 삼각쟁점에 대해 주요국간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 EU, 브라질,

인도 등이 DDA 타결의지가 있다면 정치적 절충은 가능할 수 있다.

DDA 주요 의제별 핵심 쟁점을 정리하면 농업분야에서는 관세감축 폭과 민감품목의 대우, 그리고 무역을 왜곡시키는 국내보조의 감축 폭 등이 주요 쟁점이다.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적용될 스위스 공식의 계수,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 수준, 미양허 품목의 양허에 대한 mark-up 수치 등이 핵심 쟁점으로 현재까지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농업분야의 농산물 관세 감축 및 민감품목의 대우에 관해서는 미국이 가장 강력한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EU는 방어적 입장에 있으며, G20은 미국과 EU의 중간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보조금 감축에서는 EU와 G20이 미국의 대폭적인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은 개도국의 양허관세와 실행 관세간의 차이가 매우 커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관세감축 계수가 가급적 작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농업분야에서 개도국의 관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 선진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농업이 DDA 전체의 진전을 결정하는 핵심분야가 된 상태이다.

농업협상과 같이 기설정 의제인 서비스협상은 2000년 초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협상은 2002년 이후부터이다. 서비스협상은 양허협상과 규범협상으로 구분되는데, 규범협상의 의제로는 국내규제조치, 긴급수입제한 조치,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있다.

서비스 양허협상은 2006년에 복수적 R/O(request/offer) 협상방식이 도입되었지만 사실상 2003년 9월 제5차 WTO 칸쿤 각료회의 이후 실질적 진전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규범협상의 국내규제는 '회계분야 국내규제 규범의 채택' 등 가시적 성과를 내었지만 다른 분야는 거의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07년 DDA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서비스 양허협상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규제는 DDA 종료 전까지 협정문을 만들기로 한 합의에 따라 논의가 계속될 것이지

만, 의미있는 협정문 도출을 위해서는 ‘필요성 심사 도입’ 등 핵심 쟁점에 관해 미국과 다른 회원국간의 절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DDA 협상의 총 9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채택된 규범분야에서는 반덤핑, 수산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 지역무역협정의 주요 의제이다. 협상 초기에는 논의가 협정의 명료화나 개선과 관련된 이슈 발굴 차원에 머물렀으나, 2003년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에는 기제안된 내용에 대한 회원국간의 비공식회의가 계속되었고, 2006년 들어서는 제안서별 논의를 마치고 회원국간의 이견을 좁혀 구체적인 조문을 작성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규범분야에서는 DDA 협상이 재개되면 본격적인 문안 협상이 시작되는 등 급속한 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DDA 예상타결 시나리오에 기초한 DDA 타결의 경제적 파급영향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의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GDP 성장이나 후생증가에서 소폭 손해를 보지만(GDP 증가가 0.88%에서 0.72%로 하락) 산업전체의 산출액 증가 폭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경제전체의 산출액 증가 폭은 15.2억 달러에서 49.1억 달러로 확대) 향후 협상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제조업부문과 서비스부문의 산출액 증가 폭은 농업의 개도국 유지 또는 선진국 대우 조건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반면(제조업 산출액 증가 폭은 25.2억 달러에서 26.9억 달러로 확대, 서비스의 경우 54.1억 달러에서 53.8억 달러로 소폭 감소) 농업부문 자체의 산출액은 농업의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도국지위 유지시 28.9억 달러 감소에 그치나 선진국 조건시 64.9억 달러 감소로 산출액 감소 폭이 대폭 확대).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DDA 대응전략 수립시 농업부문의 개도국지위 유지가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NAMA분야에서 우리나라는 DDA 타결로 인해 대(對)개도국 제조업시장 접근 및 이에 따른 수출증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세감축 공식은 가급적 선진국과 공조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계수

차이를 좁히는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가입한 전기·전자 등 분야별 무세화에도 협상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서비스부문에서는 DDA 협상 결과 세계적인 서비스 양허의 대폭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부문의 개방 여부가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DDA는 물론 우리나라 스스로의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가 주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김상겸 · 박성훈 · 박순찬 · 박인원 (2006. 12)

ISBN 978-89-322-1251-7 / A5/141면
7,000원

2006년 11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14차 APEC 정상회의는 보고르 목표 이행 좌표의 제시를 위해 2005년 채택된 부산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목적으로 ‘부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하노이 실행계획(Hanoi Action Plan to Implement Busan Roadmap towards the Bogor Goals)’을 승인하였다. 하노이 실행계획은 ‘다자간 무역체제의 지원’, ‘개별실행계획(IAP)·공동실행계획(CAP)의 강화’, ‘높은 수준의 RTAs·FTAs 촉진’, ‘부산비즈니스어젠다’, 및 ‘경제기술협력(ECOTECH)’ 등 다섯 가지 핵심분야에서 회원국들이 이행할 구체적 행동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개발도상 APEC 회원국의 능력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5대 핵심분야 중에서도 특히 무역원활화에 초점을 맞추어, APEC이 무역원활화를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하노이 실행계획의 무역원활화 분야는 부산 로드맵에서 합의된 2010년까지 역내 무역거래비용의 5% 추가 절감을 위해 통관절차, 표준 및 적합, 인력 이동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요구되는 포괄적인 개선 사항과 일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국별·분야별 세부적 실행 전략의 도출은 단기적으로는 부산 로드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인식

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2001년 상하이 합의 이후 APEC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역원활화 개선 실적을 평가, 분석하고 그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한편, 무역원활화 개선을 통한 APEC 자유화·원활화(TILF) 추진에 있어서 APEC 회원국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도출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정부의 무역원활화 정책입안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APEC 협력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을 부각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무역원활화의 개선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무역자유화의 경우와는 달리 그 정량화가 용이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2001년 상하이합의 이후 APEC이 무역원활화 실행계획(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TFAP)을 통해 추진한 국별·분야별 개선성과를 분석하여 APEC 무역원활화 개선의 기초적 평가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APEC 회원국들과 무역거래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 508개를 대상으로 APEC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과 개선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KIEP APEC 무역원활화 지수(APEC Trade Facilitation Indicator of KIEP)'를 개발하였으며,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활용하여 이 지수와 교역규모 사이에 존재하는 함수관계의 정량화를 성공적으로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APEC이 전략적으로 선정한 무역원활화 개선 4대 분야(통관절차, 표준 및 적합, 기업인 이동, 전자상거래)에서의 진전이 APEC 회원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분석기법을 개발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위의 정량화 작업에 기초하여 APEC이 무역원활화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를 개발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개도국과 선진국으로 구성된 APEC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무역원활화를 실천하는 네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각 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시나리오는 (i) 부

산 로드맵의 합의 내용과 같이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일하게 5%의 무역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시나리오 I), (ii) APEC 회원국들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각각 7.5%, 5%의 무역거래비용을 절감하는 차등화 방안(시나리오 II,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 (iii) 현재 APEC의 주도로 추진 중인 TFAP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역원활화 4대 분야의 총 97개 항목 가운데 개별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각 세부항목의 무역원활화 조치를 100% 이행하는 방안(시나리오 III), (iv) APEC TFAP 이행에 있어 개도국·선진국으로 분류하여 각 국가군이 앞으로 이행해야 할 부분의 평균치를 성취하는 무역원활화 조치 시행 방안(시나리오 IV) 등의 네 가지이다. 다섯째, 이렇게 설정된 시나리오에 따른 무역원활화 추진의 경제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새로운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정태적 일반균형 연산모형(CGE model)을 변형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새로이 개발한 무역원활화 지수를 무역비용과 연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각 시나리오에 따라 APEC 회원국들이 무역원활화 개선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질 국내총생산, 국민후생, 수출 등 세 가지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중요한 분석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PEC 차원에서 진행되는 무역원활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예상되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효과는 시나리오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0.42~3.09%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APEC 회원국이 동일하게 무역거래비용을 5% 절감하는 시나리오 I의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2.07% 증가하고, 선진국은 무역거래비용을 7.5%, 개도국은 5% 줄이는 시나리오 II의 경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약 3.09%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각 국가가 스스로 설정한 무역원활화 과제를 완전히 이행하는 시나리오 III에서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0.42% 증가하는 데 그친다. 이는, 한국의 경우 현재 APEC이 선정한 무역원활화 4대 분야의 총 97개 세부항목 중에서 75개 항목을 이행하겠다고 제시하였고 그 중 68개를

실행하고 있어 이행률이 91%에 달하기 때문에, 미이행 과제를 완료하였을 때의 무역원활화 변화율이 작고 이에 따라 무역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낮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즉, APEC이 개별회원국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질적 평가시스템이 결여된 현행 TFAP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나리오 III과 IV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무역거래비용의 5%(시나리오 I) 또는 7.5%(시나리오 II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를 절감하는 무역원활화 조치를 포괄적으로 실행할 경우, 시나리오 III·IV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적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둘째, 앞서 분석한 네 가지 시나리오 각각에 대하여 정태적 효과에 의해 증가되는 소득과 저축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자본축적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을 경우 한국경제에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I을 동태모형인 자본축적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5.4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태모형으로 분석하였을 때의 2.07%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효과보다 크게 높은 분석결과이다. 특히 한국이 선진국형 무역원활화를 추진하는 시나리오 II에서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무려 8.18%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 자본축적모형을 이용한 실질 국내총생산·후생효과의 분석결과는 거의 모든 APEC 회원국에 걸쳐 그리고 모든 시나리오에서 정태모형에 비해 약 2.5배 이상의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기대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분석결과는 무역원활화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시나리오 II에서 한국을 개도국으로 분류하여 다른 개도국과 같이 무역거래비용을 5% 그리고 선진국은 7.5% 줄이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2.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태모형에서는 한국이 개도국으로 분류되든, 선진국으로 분류되든 경제효과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축적모형으로 분석하면, 개도국과 선진국을 구별하는 시나리오 II에서는 한국을 개도국으로 분류할 경우 5.72%, 선진국으로 분류할 경우

8.18%의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태모형에서는 한국이 시나리오 II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가장 큰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무역원활화 개선에 따른 중장기적인 저축·투자 증대 효과를 가정하는 동태모형의 특성에 더하여 제도 개선, 규제 완화, 투명성 증대로 이어지는 일련의 경제환경 개선 노력을 통해 효과를 창출하는 무역원활화의 특성에 기인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APEC이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설정한 역내 무역거래비용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가 진행한 무역거래비용 5% 절감과 무역원활화 개선활동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분석의 결과, 현재 APEC이 진행하고 있는 무역원활화 4대 분야의 97개 세부항목 이행 프로그램을 철저히 이행하더라도 무역거래비용의 5% 절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즉 상하이 합의-부산 로드맵-하노이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무역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의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97개 원활화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APEC의 무역원활화 개선노력이 부산 로드맵의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TFP가 개선, 보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할 수 있는 중간평가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무역원활화의 개선이 모든 APEC 회원국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에 참여하는 회원국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무역원활화 개선활동은 통관절차 등 특정 세부분야의 경우 적지 않은 시설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개선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APEC 차원에서, 그리고 전 회원국에 골고루 발생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히 개발도상 APEC 회원국을 위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활동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있어서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IFIs)들뿐만 아니라 OECD와 UNCTAD 등 무역원활화 개선에 관심이 많은 여타 국제기구들과의 연계프로그램을 도

입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경제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결론과 정책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앞서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경제효과 분석에 따르면 한국도 다른 APEC 회원국들처럼 APEC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무역원활화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적지 않은 긍정적 경제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통관절차 분야만 살펴보더라도 2003년에 9.6일 소요되었던 평균 통관시간이 2004년에는 5.5일로 감소되어 약 50%에 근접하는 개선실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일 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의 지속적인 강화, 무역자동화(paperless trading) 확대 등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하노이 실행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최적 관행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하노이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전개 예정인 APEC 무역원활화 개선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위와 같은 한국의 정책목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제반 정책환경과 합치하는 무역원활화 우선 추진 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시하는 노력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형 ‘무역원활화 정형(modality)’을 개발하고 이를 APEC 차원의 무역원활화 최적 관행으로 삼아 APEC의 무역원활화 활동을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계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한국은 APEC 전반의 경제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보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APEC을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중장기 통상전략을 실천하고 홍보하는 장으로 심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는 시나리오 II에서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빠른 무역거래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정태모형, 자본축적모형에서는 공통적으로 한국이 개도국보다는 빠른 무역원활화를 진행하는 것이 경제효과가 크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한국은 WTO 체제뿐만 아니라 APEC이라는 지역경제 협력체에서도 10대 경제대국 및 무역

대국으로서 이에 걸맞는 전향적인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넷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김상겸 외 2005)가 제시하는 “무역원활화와 관세절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자유화·개방화의 경제적 효과가 배가된다”는 분석결과와 연계하여, 우리나라는 관세인하와 같이 협상을 전제로 하면서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무역자유화는 DDA나 FTA를 통하여 추진하고, 무역원활화와 같이 회원국간 심층적인 협력과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는 APEC과 강제집행력이 약한 지역협력체를 통해 추진하는 방식을 통해, 경제효과를 최적화하는 국가전략의 수립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무역원활화 분야에서는 통관자동화, 위기관리 방안, 통관 관련 단일창구 시스템 운영기법, 전자여권, 사전수속제도 등 다양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위에 제시된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나라의 선진 IT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즉 한국은 이 새로운 무역원활화 기법의 도입을 위해 APEC내 개도국들에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무역원활화는 속성상 상당한 초기 고정비용과 고도의 숙련기술이 요청되는 분야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APEC 무역원활화 확대참여는 우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혁 및 체질개선의 계기인 동시에 개도국 능력배양 차원의 대APEC 기여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3년간 200만 달러의 APEC 발전기금 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 기금의 일부를 APEC 무역원활화 능력배양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APEC의 능력배양 사업을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과업을 통해 우리가 APEC 능력배양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우리의 IT 기술을 회원국에 전파하고 보급하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됨으로써,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국가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기업의 회

원국 시장확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이성봉 · 윤미경 · 현혜정 (2006. 12)

ISBN 978-89-322-1252-4 / A5 / 110면
7,000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유입된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를 개별 투자케이스 차원에서 산업별, 진입유형별, 실질투자국 및 경영권 확보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 투자유형간 성과 차이를 분석하고, 특히 정책적 함의가 큰 진입유형간 성과 차이에 대해서는 계량분석을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재무적 M&A형 투자가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투자관점을 보여주는 총자산증가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수익성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전략적 M&A와 재무적 M&A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생산성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부가가치율에서 재무적 M&A형 투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전략적 M&A형 투자와 그린필드형 투자는 경영성과지표 어디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제조업에 대한 진입유형간 성과 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서비스분야를 다룬 본 연구의 경우에도 M&A형 투자와 그린필드형 투자 사이의 성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그러한 경향은 전략적 M&A형 투자의 경우가 재무적 M&A형 투자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 점은 향후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설계에서 그린필드 투자유형을 수혜

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하는 기존의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보편적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서비스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투자진입유형에 관계없이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의 인센티브 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핵심적인 사항인 산업내 및 산업간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보다 정치한 데이터 작업과 분석방법을 고안하는 등 추가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서 극복해야 할 것이다.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분석

이홍식 · 강성진 (2006. 12)

ISBN 978-89-322-1253-1 / A5 / 170면
7,000원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와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의 활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직접투자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나 1997년을 전후로 하여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가 산업구조와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국내외 연구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1989년 이후 고용 및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국의 탈산업화 현상의 특이성은 무엇이며,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가 과연 이러한 탈산업화 현상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에 앞서 이미 탈산업화를 경험한 OECD 국가들과 한국의 경우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러한 탈산업화는 우리만이 경험하고 있는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많은 국가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경제발전단계의 기준으로 볼 때 탈산업화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빨리 시작되었고, 그 진행속도 또한 매우 빠르다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탈산업화가 시작한 시점의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해보면 2000년 불변가

격 기준으로 한국의 탈산업화가 시작된 1989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6,130달러인 데 반해, 미국은 탈산업화가 시작된 1966년에 1만 6,417달러, 일본은 1973년에 2만 5,290달러였으며, 이외에 영국은 1970년에 1만 5,493달러였다. 즉 대부분의 국가가 1만 5,000달러가 넘는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탈산업화가 시작된 데 반해, 한국은 겨우 6,000달러가 넘는 시점에서 탈산업화가 시작됨으로써 여타 선진국에 비해 너무 일찍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진행 속도 면에서도 한국의 경우 탈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989년을 기점으로 그 후 10년간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27.8%에서 19.8%로 8.0% 포인트 하락하였는데 이는 탈산업화가 진행되기 시작한 후 10년 동안 미국(4.0% 포인트), 일본(3.3% 포인트), 그리고 영국(5.8% 포인트)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탈산업화 현상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외 선행연구결과는 탈산업화의 원인을 크게 국내적 요인(소득수준 상승, 산업간 생산성 격차, 국내투자)과 국외적 요인(저개발국과의 무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탈산업화의 주된 원인은 국외적 요인보다는 국내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여 전체 탈산업화의 70% 이상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탈산업화에 대한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아울러 기존의 실증분석들은 국내적 요인과 국외적 요인을 서로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국제교역이나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 등과 같은 국외적 요인에 의해 국내적 요인이 영향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고 두 요인을 서로 독립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모형에서의 내생성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 이 경우 국외적 요인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국내적 요인을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산업화 결정요인들의 내생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학적 패널모형을 통해 전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탈산업화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연구와는 달리 국내외적 요인 이외에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가 탈산업화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접투자가 탈산업화의 원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함을 고려하여 한국의 경

우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가 탈산업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해외직접투자의 취업손실효과와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취업유발효과를 비교 도출한 순효과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전방연관효과와 후방연관효과 모두 2000~03년에는 1차, 2차 및 3차 산업 모두가 양(+)의 영향을 받아 고용증대효과를 나타낸 데 반하여, 1990~94년에는 전체 산업에서 음(-)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후방연관효과와 전방연관효과 모두 1990~94년에는 1차 및 2차 산업은 고용유발이 음(-)으로 나타나지만 서비스업은 양(+)으로 나타나 서비스업의 순투자 증가가 고용유발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반면에 2000~03년에는 1차 산업만이 음(-)의 효과를 나타내었고, 2차 및 3차 산업은 양(+)의 효과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증대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고용감소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에 의해 상쇄되어 국내의 고용감소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얻은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한국경제의 탈산업화 자체에 대한 시각을 정리해보고 그 진행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급속한 탈산업화의 진행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기초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제조업의 수요증대와 고용창출을 유도할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조업의 부가가치 상승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제조업의 중간재적 특성을 갖고 동시에 타산업에 대한 외부성이 강한 연관 서비스산업, 즉 금융, 보험, 법률, 정보통신, 유통, 금융서비스 등의 사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산업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인하는 경우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허용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할 유인이 있는 지역, 즉 수요가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고급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서비스업, 특히 서비스수지 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특허권 사용 및 사업서비스의 경우 단순한 시장개방으로는 적자가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과거와 달리 이미 비교역제적 성격이 많이 상쇄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외국에서 고급인력들이 직접 한국으로 오지 않더라도 발전된 정보 및 통신을 통해 간접적으로 법률, 회계 및 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고급인력 확충을 위한 투자가 선행되어 외국 고급인력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국내수요가 해외공급자로부터 국내공급자로 전환될 수 있다.

셋째, 제조업 비중 감소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 감소를 정확히 예측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타산업으로의 원활한 생산요소 이동을 위하여 노동 및 자본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공계 인력 등을 포함하여 필요인력의 수요 및 공급을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일자리 창출을 통한 수요증가도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탈산업화 추세가 자연적인 현상이라면 과거 산업구조에 근거한 인력공급 정책도 수정되어야 한다.

넷째, 서비스부문에 잔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동시에 대외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산업 내부의 경쟁을 촉진시켜 자발적인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렴한 생산비용 유인에 의한 개발도상국형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제조업 중심의 고용 및 자본유입에 근거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은 한국의 경제수준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국내기업들의 투자증진을 유도하고 동시에 이 분야들에 대한 해외기업들의 국내 유입이라는 효과를 얻게 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시장수요가 가장 큰 유인이 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시장에서 국내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과 동시에 대외개방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이처럼 우리의 수요시장을 목적으로 한 직접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현 상황

에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가 아닌 국내자본과의 동등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활성화방안

오용협 · 조종화 · 윤덕룡 · 송원호 · 이호진 · 이인형 · 진 익 (2006. 12)

ISBN 978-89-322-1254-8/A5/180면
7,000원

1990년대 후반에 제기되어 최근 정부와 민간에서 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요지는, 종래의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하에서 실물지원 인프라로서의 기능에 주력했던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금융산업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다수의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국제금융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허브 구축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국제금융거래의 확대와 자본유출입의 증대는 환율, 금리, 주가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그에 따른 금융리스크의 증대를 야기한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활성화가 금융허브 구축의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중요시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시장을 통해서 각종 금융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시장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장내거래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여 주가지수 옵션은 세계 1위, 주가지수 선물은 세계 4위의 거래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시장은 미국,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금융선진국에 비하면 양과 질 모두에서 아직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외거래의 경우 그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2006년 3월 말 현재 미국의

2%, 일본의 12%, BIS 가맹국의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주요 성장분야인 신용파생상품이나, 환경관련 파생금융상품의 양적·질적 수준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금융허브정책과 파생금융상품시장 발전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파생금융상품시장의 발전이 금융허브를 달성하는 비전에 미치는 의의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국내의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과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적인 시사점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 선물, 옵션 등 장내시장의 성장세가 괄목할 만하나, 파생금융상품시장 본연의 목적인 위험의 헤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투기적인 성격을 띠는 부작용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별로 상이한 성격을 지니는 보다 다양한 상품군의 개발을 통해 투자자가 원하는 위험 헤징 수단을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상장된 주가지수 선물 옵션 인덱스 이외에 상장거래가 가능한 파생금융상품 인덱스를 보다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용파생거래 활성화의 방안으로 국내금융기관들의 신용보장 매수자로서의 기능강화와 이를 위한 원화 CDS 시장 육성, 은행의 자기자본규제시 신용파생상품을 통한 신용위험 경감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지나치게 투기적으로 이용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또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신용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감독기준을 정리하였다. 장외거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충과 종합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장외시장의 특성상 계약에 따른 맞춤형 계약구조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법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법적 위험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상기 서술한 정책제안이 현재 존재하는 시장에 대한 방안이라면 이와는 별도로 향후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을 미리 선점하여 미래지향

적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허브가 되기 위한 금융분야도 미리 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분야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이의 대표적인 예로서, 교토의정서에 따른 아시아지역에서의 탄소배출량 파생금융상품시장의 도래에 대비하여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을 준비하면서 탄소배출권을 매매하는 시장에서의 참여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이호진 · 송원호 · 장국현 · 정삼영 (2006. 12)

ISBN 978-89-322-1255-5 / A5/166면
7,000원

헤지펀드는 그 운용의 특성상 시장에서의 빠른 이동을 통해 산업간 · 산업내 자원이동의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KT&G와 같은 국내기업의 장기경영계획 및 사업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단기성 투기자본의 수익률 게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도 있는 만큼, 이러한 사안에 대한 금융정책 차원에서의 중장기적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는 달리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경제적 비용만을 수반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 총재였던 앨런 그린스펀은 헤지펀드의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규제에 따른 비용이 헤지펀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따라서 규제에 따른 금융시장의 효율성 변화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해 사전에 규제정책에 대한 투명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가 헤지펀드의 운용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여러 시사점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헤지펀드를 개관하고 주요국의 규제정책에 대해 살펴 보았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국내외 헤지펀드가 활성화될 경

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헤지펀드 등의 외국투자자본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국내투자자본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3장에서는 헤지펀드가 금융시장에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특성 중 국면전환행태(phase-locking behavior)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헤지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헤지펀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S&P500이나 다우지수 같은 시장지수 수익률과 상관관계가 작기 때문이다. 1994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헤지펀드 중 다전략추구형 펀드(Multi-Strategy Fund) 지수 수익률과 S&P500 지수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0.056이고 신흥시장펀드(Emerging Markets Fund) 지수 수익률과 S&P500 지수 수익률의 상관계수는 0.472이었다. 그러나 1998년 여름에 있었던 러시아정부의 파산과 같은 파국적인 사건은 이러한 상관계수를 순식간에 1에 가까운 값으로 변화시키는 국면전환행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국면전환효과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사건을 모형 안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리스크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 1992년 1월~2006년 9월 신흥시장펀드 중 하나인 Latininvest Fund Ltd. 수익률과 다전략추구형 펀드에 속하는 Everest Capital Global Ltd. 수익률의 시간가변적(time-varying) 상관관계를 30개월과 60개월의 윈도우를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두 헤지펀드 수익률의 상관관계는 윈도우가 30일인 경우 평소에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다가 변동성이 커지는 1998년을 전후하여 상관계수가 갑작스럽게 매우 커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련의 실증분석 결과 유사시 헤지펀드 산업에서 야기되는 위험이 일부 통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 전이되어 금융시장에 잠재적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1994~95년 멕시코정부를 긴장시켰던 멕시코 페소의 통화 위기라든가 1997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통화 및 금융위기는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돌발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평상시 정상적이던 주식시장

이나 채권시장, 또는 외환시장과는 수익률의 평균이나 변동성 면에서 전혀 다른 국면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시장이 이루어지는 셈인 것이다. 1994년 1월~2004년 8월 CSFB/Tremont에 속해 있는 14개 헤지펀드의 월별 지수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Chan, Getmansky, Haas and Lo(2005)는 14개 지수 중 12개 지수가 국면전환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모형 중에서 낮은 평균국면 확률을 이용하여 헤지펀드 산업에서 야기되는 위험이 일부 통로를 통해 금융시장에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헤지펀드의 규모와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연기금 펀드와 기부금 등 미국 신탁기관이 헤지펀드에 눈을 돌리면서 헤지펀드 업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 미 증권거래위원회(U. 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헤지펀드에 2006년 2월 1일부터 등록서류(Form ADV)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제출서류에는 과거 일반대중이 접할 수 없었던 풍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여기에는 이해상충의 가능성, 소유권 및 자본구조 그리고 운용사나 관련 자문가(investment advisor)에 대한 과거 법상·규제상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4장에서는 2006년도 SEC에 등록된 ADV 파일링 자료와 헤지펀드의 포괄적 데이터베이스(TASS Database)를 활용하여 SEC 파일링 요건의 전제, 즉 시장참여자들이 운용위험을 사전적으로 인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SEC 파일링이 제공하고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특히 이같은 정보 공개의무가 시장참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대체 가설(alternative hypothesis)은 시장이 다른 수단(예: due-diligence)을 통해 이미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ADV 파일링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비용효율적인가, 또한 헤지펀드 시장참여자들이 부정 가능성을 지닌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주면서 다른 방법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정보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2006년 헤지펀드들이 제출한 ADV 데이터에 따르면 파일링을 한 펀드들

은 하지 않은 펀드들보다 더 양호한 과거 실적과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파일링만으로 펀드의 품질을 예측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데이터는 또한 운용위험을 탐지하는 데 적절한 정보를 제시하는가에 관해 미래의 갈등 가능성과 과거의 법상·규제상 문제점 사이에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과거에 법률적인 문제를 경험한 헤지펀드(문제펀드)들이 미래의 이해상충 가능성에서 더 높은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지역에서의 헤지펀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아시아에서 헤지펀드의 수와 자산규모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에는 그 증가속도가 더 가속화되었다. 이는 전세계 헤지펀드의 주요 투자처인 유럽과 미국시장에서 헤지펀드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반면 중국, 인도 등 아시아시장에서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으로 인해 투자매력이 높아지고, 헤지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환되면서 국제 헤지펀드 자금이 아시아시장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헤지펀드의 동향은 그간 헤지펀드 데이터베이스 수집기관 등의 동향 보고서를 통해 알려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헤지펀드에 대한 연구는 글로벌 헤지펀드 활동에 치중되어 있으며, 아시아지역 헤지펀드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글로벌 헤지펀드와 비교하여 아시아 헤지펀드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기존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에 적용되는 이론과 특징이 아시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금융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헤지펀드는 가입과 탈퇴에 따르는 엄격한 제약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등보다 덜 유동적이다. 반면 투자자에 대한 그러한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은 펀드매니저가 좀더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투자하도록 만든다. 아시아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글로벌 헤지펀드에 비해 가입 및 철회 기준이 다소 낮은 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더 많은 투자자가 가입하도록 하여 펀드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도록 할 수 있는 반면에, 투자자들이 더 빠르게 투자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의 입장에서 보자면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할 수 없게 만들고, 투자철회가 갑작

스런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된 것이라면 용이한 투자철회 기준은 헤지펀드로 하여금 더 큰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만들 위험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아시아 헤지펀드 시장이 발전하는 가운데 이러한 점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헤지펀드는 시장에 대해 유동성 공급자, 가격조정자 등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높은 레버리지의 사용 등으로 인해 높은 수익을 위해 높은 위험을 감수할 유인이 있으며, 이러한 헤지펀드의 움직임이 동시에 집단적인 움직임을 초래하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헤지펀드 산업의 위험특징(risk characteristics)을 사전에 잘 살피는 것은 가능성 있는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요한 사안이다.

우선 수익률과 변동성 측면에서 아시아 헤지펀드는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에서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수익률과 변동성이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저이자율의 환경하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기회가 그만큼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펀드매니저들이 안정적인 수익률 흐름을 선호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항은 1990년대 말과 비교해 2000년 이후에는 펀드가 극단적인 손실 혹은 이익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글로벌 헤지펀드 시장의 경우와는 다르게 아시아 헤지펀드들은 다양한 투자전략을 선택하지 않는 반면에 2/3 가량의 펀드가 동일한 Long/Short Equity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듯 헤지펀드 거래가 특정 전략에 집중되어 있을 때, 과거 1990년대 초반과 Long Term Capital Management(LTCM)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모든 헤지펀드가 동일한 전략을 취하게 되면 시장에 더욱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가 있다.

전세계 헤지펀드는 최근 들어 위험을 덜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환경이 허락하는 한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 이처럼 고위험추구전략 이외에도 헤지펀드 시장은 가격 교란 가능성, 프라임

브로커 시장의 경쟁 격화로 인한 위험기준 약화 등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데이터 미비 및 헤지펀드 동향에 대한 정보 부재로 관련 당국에 포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구나 한국에서 헤지펀드 시장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왔으며, 관련 규제 역시 미비하다. 또한 국내에서 활동 중인 헤지펀드 동향에 대한 정보 역시 부재하여 헤지펀드로 인한 잠재적인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향후 헤지펀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수집, 분석, 외국 금융당국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제6장에서는 헤지펀드 산업에 대한 실증분석과 아시아지역에서의 헤지펀드 동향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헤지펀드 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국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책당국과 국제금융기구는 헤지펀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대응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규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헤지펀드 거래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혁신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축소되었으나 금융기관간 연계 강화로 금융위기 발생시에는 부정적 영향이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개도국은 금융시장 규모가 작고 자금조달능력이 취약하여 헤지펀드의 영향력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헤지펀드는 대부분 규제가 적은 역외금융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데다 자금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각국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간의 협력 강화도 중요하다. 헤지펀드의 부실화 우려시 프라임 브로커나 기타 거래기관이 이를 정책당국에 통보하는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실제로 부실화될 경우 정책당국은 파급효과의 최소화를 위해 사후처리를 신속히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프라임 브로커 등 헤지펀드 거래기관을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는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건전한 투자자금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요국의 규제수준을 상시 점검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헤지펀드와 관련된 직·간접적 규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논리에도 귀를 기울여 헤지펀드가 수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시장자율적으로 통제하면서 자본시장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최대한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내외여건 변화에 따라 헤지펀드 자금의 유출입이 빈번해지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제고하는 등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개인투자자의 헤지펀드 투자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기관투자자의 헤지펀드 투자가 정착된 이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는 헤지펀드가 역외에 설립되도록 하고, 규제에 따르는 비용이 새로운 펀드 설립을 저해하며,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효율성, 유동성 및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헤지펀드의 긍정적인 기능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더 많은 규제를 요구하는 주장에도 타당성이 있듯,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에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헤지펀드가 투자자들에게 시장수익을 초과하는 수익을 가져다주고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제고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헤지펀드가 운용상의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헤지펀드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하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대다수 투자자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추종적인 전략으로는 시장효율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이 있는 투자기회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시장수익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가져다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투자전략 또는 정확한 거래내용이 공개되어 다른 시장참가자들이 같은 투자에 나서기 시작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

는 기회는 빠르게 사라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투자전략상의 비밀 유지와 차익거래 기회를 이용한다는 헤지펀드의 독특한 투자전략과 거래상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이해상충의 존재로 다른 투자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행위는 명확히 구별될 필요가 있다.

헤지펀드와 관련된 위험관리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헤지펀드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관리를 헤지펀드에 대한 간접규제 차원에서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는 전세계 국가간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규제가 취해질 경우, 규제대상이 되는 헤지펀드들이 규제가 행해지는 나라에서 규제가 없는 다른 나라로 단순히 헤지펀드의 소재지를 이동하는 규제회피(regulatory arbitrage)에 의해 무력화되는 것을 막으면서 헤지펀드에 의한 금융시장 교란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규율이 효율적이기 위한 전제조건은 규제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얼마나 충실히 하는가에 달려 있다. 1990년대 금융시장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 이후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헤지펀드와 같이 규제를 받지 않는 투자회사 혹은 금융기관에 의한 정보 공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를 포함한 금융중개기관은 정기적으로 자산운용활동과 관계된 시장위험의 정량적 정보(quantitative information), 금융중개기관의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exposure), 유동성 위험에 관한 정보, 신용위험 등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헤지펀드와 관련된 정보의 불충분한 공개와 자산운용과 관련된 투명성 결여 등은 규제를 받지 않는 헤지펀드의 특성에 기인한다. 특히 자산운용의 비공개성, 운용자산포지션 평가와 관련된 문제점들은 과거 헤지펀드의 실패 및 파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헤지펀드의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증진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헤지펀드가 사용하는 레버리지의 정도를 적절하게 측정하기 위해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버리지는 헤지

펀드의 위험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정보는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보고서 제4장에서의 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헤지펀드 투자에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은 헤지펀드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수요에 대한 효과는 미지수이다. 한편으로 헤지펀드는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받게 되지만 그러한 압력이 반드시 헤지펀드의 정보공개 유인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많은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안정화 효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금융시장에의 유동성 공급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하에서 허용하고 있는 헤지펀드 유형은 사모투자펀드(PEF)에 불과하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더라도 국내에서는 헤지펀드 설립 자체가 금지된다. 따라서 국내의 연기금이나 생보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외국계 헤지펀드를 활용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헤지펀드 산업의 선진국인 미국의 헤지펀드 규제정책은 아직 헤지펀드 설립을 허용하지 않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박월라 · 이 군 · 은중학 · 박현정 (2006. 12)

ISBN 978-89-322-1256-2/A5/192면
10,000원

본 연구는 2000년대 들어, 특히 WTO 가입 이후 빠르게 진행되어 온 중국내 비즈니스환경 변화에 따른 외자기업들의 중국 활용전략을 기업조직 최적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틀 속에서 분석하였다. 지난 5년간 중국의 비즈니스환경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주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중국의 교통, 운수, 통신 등 인프라 개선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규제 완화이고, 두번째는 하이테크화와 서비스화로 집약되는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이다.

우선, 인프라 확충은 기업의 물류 및 통신 비용을 절감시켜 중국내 각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고질적인 지역시장간 분절성을 완화시켰다. 또한 WTO 가입 이후 중국정부가 추진해온 광범위한 제도적·정책적 규제 완화는 기업의 조직과 관련된 제도적 제한을 상당 부분 철폐 혹은 완화시켰다. 이와 같은 물리적·제도적 환경 개선은 외자기업의 기업조직과 관련된 전략 변화를 촉진하였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독자기업화, 기업집단화, 그리고 중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 추진으로 나타났다.

중국내 외자기업에서 차지하는 독자기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과 제도 개선, 규제 완화로 외국 자본이 중국측 파트너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중국내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독자기업화가 단일 외자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라면 지주회사와 지

역본부를 활용한 기업집단화는 중국내에 산재한 지사들을 아우르는 지배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지주회사는 산하 기업들의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면서 물류, 유통, 금융 등 서비스를 총괄하는 본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 중에서 중국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승인을 거쳐 설립되는 지역본부는 수출입과 마케팅, 애프터서비스 등에서 보다 큰 자율권과 세제 및 기업재무상의 혜택을 누리며, 중국시장 전역에서 보다 공격적인 경영을 전개할 수 있다. 외자에 의한 중국기업 M&A 증가 추세는 중국내 비즈니스를 재편하고 새로운 시장기회를 확보하려는 외자기업과 국유기업 개혁이 시급한 과제인 중국정부의 의도가 맞물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외자기업의 입장에서는 M&A를 통해 중국 산업의 과잉부문 신설투자에 따르는 리스크 경감과 사업영역의 신속한 확대를 기할 수 있고, 견실한 중국기업을 M&A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충원할 수 있다.

중국 산업의 하이테크화는 주로 외자기업에 의해 추동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WTO 가입 이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하이테크산업 분야의 외자기업이 생산설비나 생산공정 일부를 중국에 이전하여 글로벌 생산체제를 갖추으로써 중국 산업의 하이테크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줄곧 기술 유출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고, 지식재산권 보호문제가 외자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지재권 관련 법규 개정을 포함한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재권 보호수준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이기주의, 행정부처간 조율 실패, 국가중심적 법 집행 등 체제적·제도적·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법 집행상의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중국내 외자기업들은 이처럼 불완전한 중국의 지재권 보호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외자기업간의 外-外 연대, 중국기업이나 정부, 사회단체까지를 포괄하는 다자간의 中-外-外 연대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역시 WTO 가입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은 외자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시키는 데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나타난 외자기업의 전략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외자기업들이 중국을 서비스아웃소싱 기지로 활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둘째, 외자기업들은 현지의 법률, 경영컨설팅, 연구개발(R&D), 유통, 물류 등 전문 비즈니스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분야의 시장개척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 외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각종 우대조치 축소와 감독 강화 등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의 비즈니스환경은 꾸준히 개선되어왔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중국경제의 고도화 및 정책 전환이 가져다 주는 비즈니스 기회를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선진 외자기업들의 중국 전략을 벤치마킹해 진출방식을 전환하고 고부가가치화, 서비스시장 진출 확대, 내수시장 공략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이장규 · 이인구 · 여지나 · 조현준 (2006. 12)

ISBN 978-89-322-1257-9 / A5 / 132면
7,0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한·중 FTA 추진시 예상되는 현안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중국이 체결한 FTA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중국은 어떠한 의도로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는지, 한·중간 FTA를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쟁점과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중국의 FTA 추진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FTA 추진대상국을 협상완료국(ASEAN, 칠레, 파키스탄), 협상진행국(호주, 뉴질랜드, GCC 등), CEPA 체결국(홍콩, 마카오), 추진 예상국(한국, SCO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외교·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FTA 추진전략은 국가(지역)별로는 인접지역과 개도국 우선이고, 동기에서는 에너지자원 확보,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과 같은 전략적 요인이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해외시장 진출, 국내 지역개발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경제적 동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는 한편, 역내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제4장의 계량분석 결과와도 부합하는데,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FTA 추진대상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리적 근접성과 석유 및 광물자원 매장량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Probit 모형 결과에 대한 한계효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FTA 결정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통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5장에서는 중국이 체결했거나 협상 중인 FTA의 주요 쟁점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협상분야와 관련하여 중국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철폐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15년 정도의 관세 삭감 유예기간을 정하며, 관세삭감 일반 규율에서 예외가 적용되는 민감품목의 구체적인 리스트를 인정한다. 둘째, 원산지규정은 부가가치 기준(value-added criterion)을 세번변경 기준(change in tariff criterion)에 비해 선호한다. 셋째, 투자보장, 지식재산권, 환경표준, 경쟁정책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보다는 상품무역분야만을 대상으로 하는 FTA를 선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국의 FTA 추진전략 및 주요 협상내용을 바탕으로 제6장에서는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추진동기 및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우선 중국이 한국과의 FTA에서 기대하는 동기는 에너지자원 확보, 시장 확대, 대선진국 우회수출 등의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더욱 두드러진다. 즉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둘러싼 미국, 일본과의 주도권 경쟁 측면에서 한·중 FTA의 전략적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경제적 필요성은 부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중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는 FTA라는 틀 없이도 지리적 근접성, 문화적 유사성, 중국의 낮은 생산비용과 엄청난 잠재적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이미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양국 경제는 통합이나 다름없는 상호의존도를 보이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FTA를 추진하려는 데에는 순수한 경제적

동기보다는 역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요인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일본과 함께 아시아 최대의 경제권이며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주요 FTA 대상국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과의 FTA가 경제적 후생의 증대 및 무역확대를 가져오는 기회요인이면서 동시에 한국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이미 체결한 FTA 대상국은 대부분 중국에 비해 제조업이 낙후된 국가이므로 중국보다 제조업이 발달한 한국이 중국과의 FTA 관세철폐 협상시에 직접적으로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의 FTA로 인해 혜택 또는 피해를 입게 될 국내산업에 대한 연구를 사전에 충분히 수행하여 한·중 FTA 관세철폐 및 민감품목 설정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우리가 취할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기술우위를 유지하며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글로벌 표준 상용화, 서비스산업 육성과 같은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한·중 무역 및 투자 구조를 고려해볼 때 한·중 FTA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품무역에 대한 거래비용 절감 차원이 아닌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 보호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과 연계한 ‘포괄적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한·중 FTA 추진시 중국의 수입관세는 물론 국제표준과 같은 비관세장벽 철폐를 강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제품의 중국 내수시장 확보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고려할 때 한·중 FTA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더욱 적극적임을 감안하여 한국은 중국과의 FTA를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포괄적 FTA’를 체결하도록 시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은 대중국 경제통상협력을 통해 중국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균형 있는 대외통상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정성춘 · 김양희 · 이홍배 · 김은지 · 이형근 (2006, 12)

ISBN 978-89-322-1258-6 / A5 / 372면
12,000원

10여 년 넘게 장기불황에 시달려온 일본경제가 2000년대 들어 전후 최장의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는 반면, 1997년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한 한국경제는 최근 내수부족, 투자부진 등에 시달리면서 성장잠재력이 점차 저하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최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일 경제동향을 보면서 일본 경제회복의 배경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토록 기나긴 시간 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일본경제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본 보고서의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일본 경제회복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는 200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인상이 매우 강하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제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이를 매우 잘 극복해왔다. 기업수익률도 크게 회복되었고 기업의 재무구조도 안정적인 구조로 탈바꿈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수익성 및 안정성 등 지표는 크게 개선된 반면 한국경제의 거시경제적 지표는 점차 악화되어왔다. 경제성장률은 하락하였고 2000년 이후의 성장잠재력 또한 1990년대에 비해 저하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양극화는 심화되었고 일자리부족으로 인한 청년실업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보고서의 제2차적인 목적은 일본경제 회복과정의 고찰을 통해 한국경제가 직면한 상기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서론에서는 우리경제가 당면한 문제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경영실태를 고찰하여, 기업차원에서는 경제위기 이전에 안고 있던 기업경영상의 구조적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제 전체적 차원에서 새로운 구조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잠재성장률의 저하, 고령화 및 자녀수 감소로 인한 노동공급의 경향적 감소, 투자부진으로 인한 자본스톡 형성 및 연구개발 여건의 악화,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수요증대 및 재정건전성 유지의 필요성 증대 등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중요한 구조적 문제로 제시되었다.

제2장에서는 1990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일본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 대하여 경제동향과 정책이념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첫째, 1990~2001년을 하나의 시기로 구분하고 이 시기에 나타난 경제현상들을 소개하면서,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확장적인 총수요관리정책의 무력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일본정부는 2000년대 이후 경제정책기조를 총수요관리정책에서 공급효율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러한 정책기조 전환을 바탕으로 이른바 구조개혁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제3장에서는 정부부문의 구조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정부부문의 개혁정책은 재정 및 공공부문, 사회보장, 산업·기술, 지역정책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에서 나타난 개혁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재정 및 공공부문 개혁분야에서는 일본이 안고 있는 재정현황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일본정부의 구체적인 재정개혁정책을 소개하였다. 한편, 우정사업 민영화, 특수법인 민영화, 공무원 개혁 등 공공부문이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일본정부의 개혁사례들도 소개하였다.

사회보장개혁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보장제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연금, 의료, 간병제도 등 각 분야에서 추진된 개혁사례를 고찰하였다. 일본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핵심은 부담과 지급의 균형을 추구하는 개혁이라는 점을 소개하고, 일본정부는 지나치게 재정의존적인 사회

보장보다는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추구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산업·기술 및 지역정책에서는 기업의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혁으로서 산업재생기구, 산업활력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 기업의 사업 재구축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가 어떻게 도입되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또한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추진한 과학기술정책 및 지적재산정책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나아가 쇠퇴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추진한 구조개혁특구 등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기업부문의 개혁사례를 소개하였다. 최근 일본의 경제회복은 정부부문 구조개혁의 성과라기보다는 기업구조개혁이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기업이 안고 있던 이른바 3대 과잉(과잉고용, 과잉설비, 과잉채무)이 해소되는 과정과 이러한 해소과정에서 나타난 일본기업들의 경영패턴 변화를 묘사하였다. 특히 일본적 기업경영패턴이었던 장기고용, 연공서열, 기업노조 등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기업지배구조상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구조개혁정책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제반 정책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구조개혁이 공급효율을 증시하는 방향으로 정책노선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고, 이러한 정책노선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을 확립하였다는 점, 그리고 구조개혁, 특히 기업부문에서의 구조개혁이 경기회복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며, 악화된 경제상황에서도 인본주의적 기업지배구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한 성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향후 개혁정책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의 유지가 필요하며, 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격차의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가와 더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재정건전성 유지 및 공공부문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정

부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이지만 향후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재정수요가 급속히 팽창할 것을 고려하면 재정건전성 유지를 낙관할 수만은 없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에 의존하는 단기적인 경기확대정책은 지양해야 하며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수증대 등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에는 신중하면서도 민간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의 구축이 매우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사회보장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과 수혜자간의 적정한 부담을 실현하고 나아가 사회안전망 확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계적인 사회복지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생산성과 인재양성을 중시하는 산업기술정책,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혁신체계의 확립, 기업지배구조 개선, 고용 및 노사관계 개선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공급효율 증대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수요팽창정책이 아니라 경제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공급 측면의 정책이 더욱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이재영 · 이철원 · 신현준 · V. D. Kalashnikov (2006, 12)

ISBN 978-89-322-1259-3 / A5 / 274면
10,000원

최근 러시아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동부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은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의 경제적·외교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러시아 동부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주요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진출 현황을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기본전략 및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장에서는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을 수립 배경, 구도, 내용 및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러시아정부의 동부지역 개발전략 기조인 「1996~2005년 및 2010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경제 및 사회발전」 연방 특별 프로그램은 사회·경제 인프라 구축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 석유·가스 원료기지의 개발 및 주요 파이프라인 망 건설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 프로그램 실행 예산의 69.3%가 연료·에너지집합체(Complex) 부문에 지출될 예정이어서, 에너지자원 개발과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과 같은 연료·에너지 부문의 발전이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 있어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 동북아 외교전

략적 차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러시아 동부지역의 에너지는 한국의 해외 자주개발 에너지 확보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고,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중심의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은 에너지 유관산업에 종사하는 한국기업의 진출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다. 또한 남·북·러 전력망 계통연계나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경제의 개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전략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장은 주요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과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 강대국들은 러시아 동부지역을 경제적으로는 에너지 공급원이자 신흥 수출시장 및 투자대상으로, 외교안보적으로는 동북아 국제정치 무대의 새로운 주체로 인식하고, 정부 및 기업 차원의 다양한 전략을 통해 적극 진출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의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러시아 동부지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 정부간 대화채널을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민간 석유 메이저들을 중심으로 신규 유전 개발 및 러시아 에너지기업의 인수·합병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 동부지역에서의 자주개발 원유 및 가스 수입 확대를 위해 정부간 상호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상설 경제협력체를 통해 공적원조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국영 에너지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를 받으며 에너지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자본재 및 기계류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도 자국 에너지안보를 위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국영 석유회사를 중심으로 러시아 동부지역 에너지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EU는 경제통합체의 특성상 통일된 진출전략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독일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에너지동맹을 강화하면서 민간 석유 메이저들을 중심으로 러시아 동부지역 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한국도 에너지안보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이자 신흥 수출시장 및 투자대상으로 러시아 동부지역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외교

력 및 자금력에서 주요국 정부 및 석유 메이저들에 비해 열세에 놓여 있다. 이에 한국은 주요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전략이 던지는 시사점을 교훈 삼아 정부 및 민간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경제구조 및 지정학적 환경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 동부지역에서 석유·가스 개발 참여를 통해 에너지안보를 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가장 유용한 벤치마킹 대상이다. 특히 러시아 동부지역에 대한 공적원조 및 주요 개발사업 차관 지원, 국영 에너지기업 중심의 정부보조 활성화 등은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정부간·국영기업간 전략적 연대 강화, 중국정부의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일관성과 강한 추진력 등도 간과할 수 없는 교훈이다.

4장을 통해 본 현재까지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은 매우 미미하며, 특히 에너지부문의 진출은 초보적인 단계로 평가된다. 이는 우리의 체계적인 전략 부재와 러시아 동부지역의 열악한 투자환경에 기인한다. 본 장에서는 러시아 동부지역의 투자환경 평가를 위해 동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서베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러시아 동부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러시아 세관의 통관지원, 현지 유통경로 이용의 어려움, 러시아정부의 수출규제, 현지 근로자의 안일한 작업태도, 현지 금융조달 여건 열악 등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향후 러시아 동부지역 투자전망을 매우 밝게 보았으며, 특히 자원개발분야를 가장 유망한 투자업종으로 추천하였다.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5장에서는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의 기본방향과 전략적 진출기반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부문별 참여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세계적인 천연자원 보고인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을 통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자원의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다. 러시아 동부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 물류의 동쪽 관문이기 때문에, 한국은 동 지역 진출을 통해 유라시아 교통 및 물류 통로를 개척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러시아 동부지역에 진출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외교적 영향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진출거점을 구축하고, 국내 추진체제를 정

비하며, 한·러 협력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중장기적으로 동부지역 산업의 현대화 및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천연자원의 개발 및 그 수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매진할 전망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석유·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자원 개발, 러시아와의 전력협력,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등의 부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이 러시아 동부지역 석유·가스 개발에 참여하는 목적은 미국이나 EU의 다국적 기업이 추구하는 자원개발을 통한 수익성 확보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처럼 자주개발 석유·가스 확보를 통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데 있다. 따라서 참여의 주체는 정부 및 정부의 전략을 이행하는 국영 에너지기업이 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그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국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에너지개발 참여 경험이 적고, 대외교섭력이 부족하다. 이에 한국기업들은 리스크 회피와 향후 진출 경험 노하우 축적을 위해서 독자 진출보다는 국내 혹은 러시아 및 주요국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진출 형태는 지분 참여와 러시아기업과의 합작기업 설립이 적합하다. 특히 러시아기업과의 합작은 단일 사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업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 참여시 관련이 있는 플랜트 및 노후 생산설비 개보수 부문 등과 동반 진출하면 산업간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 향후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처럼 러시아 동부지역에 대한 재정적·인도적 지원을 통해 한국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뢰를 축적하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출을 위한 포석을 다지는 방법이다.

한·러 전력협력은 한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남북경협 확대를 통해 통일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업이다. 한국과 러시아 간 전력망 계통연계는 경제성 측면은 충분히 입증되었지만, 송전망이 북한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북한이 개방수준을 높인다는 전제 아래 남·북·러 전력망 계통연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남·북·러 전력

망 계통연계 사업 참여 전략은 단기에 소극적 대응, 중기에 적극적 참여, 장기에 주도적 참여 등 단계별 대응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러시아 주도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러 전력망 계통연계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와 재원조달 부담을 피하면서 남북한 양자 차원에서 대북 송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북한간 전력망 계통연계 사업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참여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 중기적으로 북·러 및 남·북간 전력망 계통연계에 있어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되면, 남·북·러 3국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3자간 전력망 계통연계 사업에 대한 공동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주도로 전력망 계통연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근본적인 에너지난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병행할 필요도 있다.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사업은 에너지 유관 인프라 구축 사업 중 가장 대규모로 추진되며, 타 산업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다. 계획 초기에는 중국과 일본의 건설자금 제공 및 외국기업의 건설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정부가 에너지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국내기업 주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에너지를 비롯한 전략적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한국기업들은 체계적인 사업 참여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1단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그러나 건설장비와 대구경 고압 강관소재에 대해서는 공급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능하다면 금융제공 참여 방안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극동지역의 코지미노 만에 건설될 석유타미널 공사와 2013년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2단계 건설에 진출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2단계 공사의 자금조달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통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관련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경제적인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정상회담 및 각 공동위원회 등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면서 강관과 강판의 동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조정,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위험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업 차원에서는 트란스네프트사 등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관련 현지업체 및 기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고급 정보의 수집 및 현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사업 참여를 위해 구성된 ‘동시베리아 송유관 조사협의회’의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 참여확대 방안은 정부와 민간이 통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국내 추진체제와 한·러 협력채널의 기능을 통합해 일원화한 새로운 지원체제로서 가칭 ‘한·러 동시베리아·극동 협력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본 센터는 러시아 동부지역과의 협력에 필요한 외교통상 기능을 전담하며, 한·러 양국간 정례적인 의견교환의 장(場)이 될 수 있다. 또한 주요 협력분야와 정책연구 등을 주제로 분과를 구성하고, 분과별 토론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 및 민간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연구

이순철 · 정재완 · 최윤정 · 오민아 (2006. 12)

ISBN 978-89-322-1260-9 / A5/188면
7,000원

1991년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 이후 인도경제는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이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프라 사업 확대, 제조업 육성 확대, 각종 규제 완화 및 외국인투자 개방, 새로운 소비문화 확대에 따른 소비증대, IT를 비롯한 기술 혁신 및 R&D 분야의 기술 파급효과 잠재성 제고 등 소비시장으로서 또는 투자처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대(對)인도 투자는 2004년과 2005년 각각 전년대비 2.4배, 2.2배 증가하는 등 2004년 이후로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도·소매업, 건설업, 광업 및 부동산업 등 다양한 투자형태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형적으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집중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대인도 투자의 동기는 요소추구에 의한 비용절감형을 포함해 거대 소비시장의 잠재성을 고려한 시장추구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의 매출액 및 순이익은 전반적으로 증가 또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기업도 많아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경영의 현지화가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인도의 투자여건 및 환경에 대한 정보를 기(既)진출 업체 및 지인 등을 통하여 얻고 있으며 우리 정부 및 인도정부에 대한 지원

및 건의사항으로 투자정보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제공에 대한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현지경영의 애로사항으로 진출단계에서는 인도의 복잡한 행정절차, 투자 허가기관 및 합작기업의 잦은 태도 변화, 공장부지 선정 및 시공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으며, 운영단계상에서는 인프라시설 부족, 원부자재 조달, 고용 및 인사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지기업 직납 및 직판·직매장을 통한 판매 또는 납품과 관련하여 대금회수, 가격경쟁, 물류 및 AS 고비용 등의 애로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 및 조직의 현지화, 부품의 현지화, 고용 및 인력관리의 현지화, 제도 및 문화의 현지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운영자금 및 자금조달은 한국의 모기업과 현지 금융기관의 용자에 의한 조달이 많았으며, 현지 금융기관에서의 자금조달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큰 차이 없이 높은 이자율, 복잡한 용자절차, 모기업 보증 요구 등의 애로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지원체계 구축 및 금융의 현지화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인도기업들은 향후 2~3년 이내에 우리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은 원자재 및 부품의 현지조달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기술 및 부품의 현지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노무관리 면에서는 숙련공은 물론 전반적인 인력의 부족이 심각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높은 이직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노사간의 갈등요인으로 임금, 책임의식 부족 및 단일한 작업태도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인도에서는 인력 및 노무관리의 현지화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영 및 마케팅의 현지화를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현지화 제품 생산 및 개발, 급변하는 인도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추진, 기존 선점 시장의 우위성 유지 및 확대, 현지의 유통경로 및 유통망 구축 등이 요구되

며, 이를 위해 철저한 사전 투자, 신용거래보다는 초기결제 강화, 단계별·계층별 현지화 제품 개발, 기술 혁신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지시장, 규제 및 제도, 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기반 제공, 한·인도 CEPA의 조속한 추진 등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및 부품의 현지화로는 기술의 현지화 역량 제고, IT 등의 현지 기술 적극 활용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은 현지 기술지도와 R&D 확대, 기술 인력의 국내연수 확대 및 외부기관 위탁, 현지 협력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지도 및 관리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각종 연수프로그램 제공, 인도 연수인력을 위한 입국사증제도 확대, 기술 발굴 및 협력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력 및 노무관리의 현지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 확보 및 적절한 교육, 본사 기업문화와 현지시장에 대한 이해 공유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은 인력풀 확대, 현지직원에 대한 비전 제시 및 공정한 인력관리 등을 추진하고, 정부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인력 양성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금융의 현지화를 위해서는 현지법인 중심의 재정체계 구축, 현지금융시장 활용 극대화, 금융위험요소 대응역량 확대 등의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금융기관 활용, 현지 주식 상장 및 국제적인 금융관리체계 구축 등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같은 관련 금융기관의 진출 확대를 정부의 지원방안으로 강구해볼 만하다.

효율적인 관리조직 구성, 단독투자형 지배구조, 글로벌화된 경영조직 등의 전략을 고려할 수 있는 조직의 현지화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은 권한과 책임의 범위 설정 및 이양, 지속적인 연수 및 교육 등을 추진해야 하는 반면, 정부는 인도시장 및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지의 법률, 문화, 제도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것

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현지 법률의 숙지, 현지 사회활동 및 현지 정부지원을 통한 이미지 개선, 인적네트워크 강화 등이 필요하며, 정부는 관련 정보 제공, 각종 포럼 및 지원프로그램 제공 등의 지원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우리 기업의 대인도 투자 성공 여부는 향후 인도 시장에서 경영 및 마케팅, 부품 및 기술, 인력 및 노무관리의 금융, 조직, 제도 및 문화등 이들 각 부문의 현지화 전략을 어떻게 펼쳐가는데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인도 진출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며, 우수인력 확보 및 교류 확대 등 인력 양성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도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필요시 금융지원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와 더불어 우리 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 부품 및 소재를 공급받아 현지에서 조립·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한·인도 CEPA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박복영 · 황주성 · 박철형 (2006. 12)

ISBN 978-89-322-1261-6 / A5 / 238면
10,000원

2000년부터 시작된 신고유가시대의 도래 이후 막대한 규모의 오일머니가 다시 중동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오일머니를 기초로 중동경제는 다시 활기를 띠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의 고유가 시기에 중동의 산유국이 밀집한 소위 걸프지역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오일머니의 규모와 흐름에 대한 분석, 걸프지역의 최근 경제정책 분석, 세계 주요국가의 걸프지역과의 협력정책 분석, 우리나라의 협력정책 방향 제시 등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고유가가 시작된 2000년 이후 6년간 걸프지역으로 유입된 오일머니 규모는 1조 3,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오일머니 증가분 중 수입증가의 형태로 다시 누출되는 비율은 약 40%로 1970년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유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이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 지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가리키며, 세계적인 불균형(global imbalance)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걸프지역은 경상수지 흑자 중 약 40%를 해외에 포트폴리오 형태로 투자하며, 비슷한 규모를 외환보유고 축적에 사용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투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반면 외국은행 예금의 비중은 크게 줄어든 것이 1970년대와 크게 달라진 것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방만한

재정지출을 경제하며 석유안정기금의 형태로 미래를 위해 정부저축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도 과거와의 큰 차이점이다. 2000년 이후 걸프지역 국가의 석유안정기금은 최소 2,000억 달러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이 적극적 해외투자의 재원이 되고 있다.

걸프지역에서 경제정책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의 판매를 통해 얻는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화석연료가 고갈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산업구조를 다각화하는 것이다. 최근에 에너지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석유수요 증가에 대한 확신을 기초로 석유와 가스의 생산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다각화를 위해서는 민영화나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에서는 에너지연관 산업인 석유화학, 알루미늄, 비료 산업 등이 주요 육성대상이다. 이러한 산업은 걸프지역의 풍부한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으로부터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다. 서비스 산업에서는 금융, 관광, 물류, IT, 비즈니스서비스, 교육 등이 유망한 산업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걸프지역에는 1980년대 이후 20년 이상 산업다각화 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는 이 지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때문이다. 소위 '지대수입형 국가'로서 정부가 압도적인 경제적 역할을 하고 민간경제가 거의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주도의 산업정책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걸프지역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개혁의 방향은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하고 경제개방을 통해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심화하는 것이다. 정부역할 축소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영화와 보조금 축소,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EU, 중국, 일본 등은 최근 걸프지역과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고유가와 더불어 에너지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걸프지역의 수출시장이 확대된 결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 문제가 자국의 안보나 사회안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걸프 지역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개방이라는 체제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

다. EU는 경제통합을 통한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 걸프지역 사이의 틈새를 활용하여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앞으로 국제유가의 제한적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위험이 더 이상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중동경제는 당분간 5% 내외의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세계 석유시장에서 걸프지역의 영향력은 계속 증대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에서도 이 지역에 대한 의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걸프지역과의 협력을 정치적·경제적 영역에서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중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중동이 지닌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중동 정책에는 종합적인 방향이나 전략이 미흡했으며 정책의 일관성도 결여되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일관된 정책 추진을 담당하는 정부내 전담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일방적 경제진출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수출과 플랜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에만 국한되면 실질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에너지분야에서 중동의 협력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중동지역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인력을 육성하며 서비스부문과 IT부문을 중심으로 민간경제부문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는 인력개발 지원, 서비스부문에서의 공동투자, IT 인력 및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간 협력, 발전경험의 공유 및 발전전략 수립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양한 경제협력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중동 경제협력은 상품 수출, 건설 및 플랜트 수주, 에너지 수입의 세 가지에 거의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동의 경제발전전략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우리도 협력분야를 다변화해야 한다.

금융, 부동산개발, 물류, 관광, 비즈니스지원, 의료 등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하여 이 분야에서의 협력 및 진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막대한 오일머니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분야의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슬람금융(islamic banking)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동지역의 각종 공공인프라 민영화에 참여하면 인근 아랍지역이나 아프리카시장으로의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중동지역의 인프라 개발이나 대형 프로젝트에 BOT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넷째, 사안별 접근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패키지형 협력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동은 공공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고 의사결정이 매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에너지협력, 플랜트협력, 기술협력, 문화협력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여 양측간의 요구를 교환하는 방식이 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패키지형 협력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 내부의 협력과 조정 그리고 정부와 기업간의 협력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기업의 중동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간접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기업의 진출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계속 축소되고 있고 그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홍보지원 및 국가이미지 개선사업, 중동 전문인력 양성 지원, 한국문화 전파 및 한국학 연구 지원, 이슬람문화 교류, 인력개발 지원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과 같은 간접적 지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대중동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상외교는 국내적으로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서 중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양국관계에서는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이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란은 인구, 자원, 경제발전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다. 따라서 이란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이란의 외교적 관계가 지나친 긴장관계로 발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김원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 곽재성 (2006. 12)

ISBN 978-89-322-1262-3 / A5 / 252면
10,000원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그리고 최근에 가입한 베네수엘라를 포함하여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1991년 자유무역지대로 출범, 1995년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는 등 개도국간 경제통합체 중 제도적으로 가장 앞선 통합체이다. 2006년으로 출범 15년째를 맞이한 MERCOSUR는 역내교역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급증 등 괄목할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개도국간 경제통합의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을 포함하는 MERCOSUR 시장의 높은 발전잠재력과 시장성을 인식해 2004년 대통령의 남미 순방시 FTA 협상을 전제로 한 · MERCOSUR 무역협정 체결 타당성 검토 공동연구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공동연구회의는 2006년까지 네 차례 개최되었으며, 양자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본격적인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만간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한 · MERCOSUR FTA 협상에 대비해 그간 MERCOSUR가 제3국과 체결한 FTA나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을 분석, 우리나라의 대(對)MERCOSUR FTA 협상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95년 관세동맹 출범 이후 MERCOSUR는 지금까지 10여 년간 많은 국가와 FTA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같은 기간 FTA를 추진해왔던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와 칠레가 40개국 이상과 FTA를 성사시킨 데 반해, MERCOSUR는 현재까지 칠레와 안데스공동체(CAN) 5개국 등 6개 국가와만 FTA를 체결했다. 지역별로 지금까지 MERCOSUR가 체결한 FTA 대상국은 모두 중남미국가들에 국한되고 있다. 역외국가 중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인도 등 개도권 국가와 FTA보다 느슨한 단계의 특혜관세협정(PTA)을 체결했을 뿐이다. 그에 반해 선진권과의 FTA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와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은 농업보조금 등 주요 협상쟁점을 둘러싼 대립으로 당초 협상시한을 넘긴 채 지체되고 있다.

MERCOSUR는 내부 조직상으로 볼 때 공동시장위원회(CMC), 공동시장그룹(GMC), 무역위원회(CCM) 등 매우 세부적으로 임무가 구분된 집행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행정사무국(SAM)을 몬테비데오에 두고 있는 등 초국가적 통합체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매우 미약한 통합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SAM은 단순한 행정지원기능만 갖고 있으며, MERCOSUR가 관세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대외협상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한 점은 EU와 대별되는 특징이다. 이는 회원국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중요한 사안들이 추진,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편, 대외협상의 장기화 및 잦은 정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관세동맹으로서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개별국의 대외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점 또한 경험적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MERCOSUR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MERCOSUR의 FTA 협상 체계와 협상 경험 등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지금까지 MERCOSUR FTA 협상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MERCOSUR와 FTA 협상을 진행시킨다면 이는 1+4, 또는 신회원국 베네수엘라를 포함하는 1+5의 형태가 될 것이며, 특히 상대가 때로는 관세동맹 형태, 때로는 개별국 형태로 협상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커 매우 까다로운 협상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MERCOSUR가 FTAA, EU, 인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제3국과 추진한 협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MERCOSUR와의 협상은 단기적으로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PTA를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전면적인 FTA를 체결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다음으로 한·MERCOSUR 무역구조, 관세구조, 통상현안 그리고 FTA 경제효과 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양자간 FTA 협상시 예상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세구조 측면에서 살펴볼 때 양자가 현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일부 품목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이해집단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농산물분야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데 반해 MERCOSUR는 자동차, 섬유·의류, 신발류, 시계 등의 품목에 고(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두 번째로 양자간 통상현안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가 MERCOSUR측에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우리 제품에 대해 직접적으로 취하고 있는 반덤핑 조치와 간접적으로 취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이다. 그에 반해 MERCOSUR측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사항은 쇠고기, 쌀, 닭고기 등을 비롯한 농축산물시장 개방이다. 세 번째로 한·MERCOSUR FTA 체결시 예상되는 경제효과를 산업별로 대별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이 커다란 피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MERCOSUR측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산업이 커다란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양자간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물, 자동차 및 부품 분야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MERCOSUR 대외정책의 세 가지 시나리오에 입각해 우리나라의 MERCOSUR와의 FTA 협상전략을 제시해보았다. 먼저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장기간 표류하고, MERCOSUR 회원국들이 개도국과의 FTA 협상을 우선시하는 '남남협력 중시형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이 농업부문을 민감분야로 지정, 상당부분 유보할 경우 MERCOSUR측의 한국과의 FTA에 대한 관심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MERCOSUR와의 FTA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서는 한·미 FTA 협상결과를 토대로 농산물 관세할당제(TRQ) 확대를 포함한 농축산업부문 추가개방안과 이에 따른 국내적인 조정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WTO DDA 협상이 타결되어 그간 지체되었던 FTAA 협상이나 EU와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남북협력 중시형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미국 및 EU와의 FTA가 먼저 체결되어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휴대폰, 석유화학제품과 기계류 등이 MERCOSUR 시장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MERCOSUR와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중국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

세 번째는 현재 MERCOSUR에 대해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는 우루과이와 파라과이의 요구로 MERCOSUR가 관세동맹에서 자유무역지대로 후퇴하는 ‘각개약진형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MERCOSUR의 와해와 같은 극단적인 결과도 포함되지만, 개별국과의 FTA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정식회원 가입이 MERCOSUR의 통합체 발전이나 협상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가 큰 관건이다.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 및 무역정책상의 조건을 고려한다면, 한·MERCOSUR FTA 협상에 베네수엘라가 참여하는 경우 한·MERCOSUR 협상은 기존 다른 역외권과의 FTA 협상보다도 더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FTA 협상 중에도 별도로 기존 한·MERCOSUR 협의회(Korea·MERCOSUR Consultative Meeting)를 확대·강화함으로써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MERCOSUR가 실용주의에 입각해 주요국과의 상호 무역 및 산업협력증진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투자확대도 MERCOSUR와의 협상 모멘텀 유지 수단이자 협상력 제고 수단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대MERCOSUR 협상과정에서 MERCOSUR 회원국가간의 이해충돌을 면밀히 분석,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개별국가와의 FTA 협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지역무역협정(RTA)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이홍식 · 신관호 · 이종화 · 김형주 (2006. 12)

ISBN 978-89-322-1263-0 / A5/100면
7,000원

1980년대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급격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유럽, 중남미 국가 위주로 추진되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전세계 모든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 사실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GATT/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였으나,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즉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최근에는 지역주의 대열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FTA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FTA가 개방을 통하여 무역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이 과연 생산성 제고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한·미 FTA가 추진되면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한 우리 경제 전체의 종합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국내산업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생산성 증대 효과를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경제 이론에 기초한 합리적인 분석모형을 설정하여 FTA에 따른 생산성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 첫째,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생산성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전 단계로 RTA의 무역증진 효과를 계측함에 있어서 협정대상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RTA가 무역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차별적으로 계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개별 RTA의 무역증진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계측한다는 장점뿐 아니라 본 연구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RTA가 경쟁을 심화함으로써 생산성 증대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RTA 협상국간의 무역구조와 관련이 매우 깊다. 즉 협상국 사이의 무역구조가 유사할수록 경쟁이 보다 더 치열해질 수 있고 따라서 이를 통한 무역 증진 및 생산성 증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무역구조가 산업구조를 반영한다고 할 때 유사한 무역구조를 가지는 국가간에 RTA가 체결될 경우 자본재나 중간재 수입을 통한 기술의 전파력도 보다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TA의 생산성 효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무역구조의 변화 양상을 한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 무역구조 변수를 모형에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둘째, RTA가 무역을 증진시키지 않고도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무역외 경로를 구체적으로 분석에 포함하여 그 중요성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RTA의 체결은 무역을 증대시키지 않고도 여러 다른 경로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공헌할 수 있다. 즉 RTA 체결국과의 무역 비중이 커지게 되면 기술협력이나 제도개선, 경쟁효과 등과 같은 직접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RTA의 생산성 증대 경로를 무역을 통한 경로와 무역외 경로로 나누어 각각의 중요성을 계측함으로써 RTA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상의 분석모형을 사용한 추정결과에 의하면, R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하에서는 양국간의 수출유사성이 높을수록(무역구조가 유사할수록) 쌍방간의 무역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TA가 체결될 경우

수출유사성과 무역창출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데, 수출구조가 서로 경쟁적일수록 RTA가 체결되면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쌍무간의 무역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RTA의 무역창출 효과는 수출유사성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RTA가 체결될 경우 RTA 참여국의 생산성에는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생산성파급경로를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한 결과, RTA 체결은 무역증진을 통한 개방도의 증가 경로와 그밖의 무역외 경로 모두를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실질개방도가 1% 포인트 높아지면 생산성은 0.09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TA의 직접적인 생산성증가 효과를 보여주는 RTA 회원국과의 무역비중(RTA intensity)도 생산성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밝혀졌는데, RTA 집약도가 1% 포인트 높아지면 생산성은 0.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원용하여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의 생산성 증대 효과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연평균 0.06~0.12%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한·미 FTA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첫째,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현재도 구체적인 내용이 계속 협상단계에 있는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존의 RTA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둘째, RTA 회원국들의 산업구조 특성을 비교하여 RTA 체결을 전후하여 과연 산업별로 어떤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하지 못하였고, 셋째, RTA 체결이 내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넷째, RTA가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는 직접적인 경로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추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만 해도 FTA의 변방국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FTA 확산 추이

는 간과할 수 없는 대외경제여건의 중요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세계적인 FTA 네트워크에 편입하지 않는다면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시장을 점차 상실하게 되며, 이와 같은 수출의 부진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가 FTA를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다 선진화된 국가와 FTA를 통해 국내시장에서 경쟁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우리 산업 전반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FTA 체결로 회원국이 얻게 되는 무역창출효과 이외에 생산성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FTA의 추진 주체가 어떻게 정책적 대응을 해나가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 마련에 소홀하다면 FTA에 따른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반면 개방된 경제환경 속에서 순조로운 적응과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고 경제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해 나간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FTA 체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From East Asian FTAs to an EAFTA: Typology of East Asian FTAs and Implications for an EAFTA

Chang Jae Lee, Hyung-Gon Jeong, Han Sung Kim, and Ho-Kyung Bang (2006, 12)

ISBN 978-89-322-1267-8 / A5/144면
7,000원

최근 동아시아지역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됨에 따라 동아시아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동아시아 역내국가간에 체결된 FTA 협정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동아시아 FTA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실현 가능한 동아시아 FTA의 형태를 모색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간에 체결된 FTA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FTA 협정체는 AFTA(ASEAN FTA), 중·ASEAN 상품무역협정, 한·ASEAN 상품무역협정, 일·싱가포르 EPA, 한·싱가포르 FTA 및 일·말레이시아 EPA이다. 동아시아 FTA가 앞서 언급된 FTA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는 없지만, 향후 동아시아 FTA 협상시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1장에서는 그동안 동아시아국가들간에 체결된 FTA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제2장, 제3장 및 제4장은 동아시아지역의 기체결된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상품분야 관세양허구조, 특혜원산지 조항 및 서비스·투자·기타 주요 이슈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실현 가능한 동아시아 FTA 형태 및 방법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각 장의 주요 결론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의 상품분야 관세양허구조 분석 결과 동아시아지역의 관세양허 접근방식에는 크게 두가

지 형태, 즉 ASEAN형 및 개별품목별 접근방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ASEAN형 접근방식은 AFTA, 중·ASEAN FTA 및 한·ASEAN FTA가 있고, 개별 품목별 접근방식은 한·싱가포르 FTA, 일·싱가포르 EPA, 일·말레이시아 EPA 등이 있다. 한편 상품분야의 자유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민감품목 및 관세양허제외로 지정된 품목의 총 관세품목 및 수입액에서의 비중을 계산하였는데, 그 결과 FTA 협정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ASEAN 국가들은 CLMV(ASEAN 후발 4개국) 국가들 때문에 상품분야의 자유화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고, FTA 회원국간에도 자유화의 정도가 대칭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아시아국가들이 사용하는 HS 세부품목 분류기준이 한국 HS 10단위, 일본 및 말레이시아 HS 9단위, 중국 및 필리핀 HS 8단위 등으로 각각 달라 역내 공통의 세부 관세양허 민감품목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한국 및 일본의 경우 농업, 수산업이 가장 민감한 산업으로 조사되었다.

제3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AFTA와 중·ASEAN FTA 원산지규정은 대부분의 비완전생산품목에 대해 FOB 기준으로 비원산지 재료의 60% 이하의 부가가치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비교적 간단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ASEAN FTA, 한·싱가포르 FTA, 일·싱가포르 EPA 및 일·말레이시아 EPA는 품목별로 특정 원산지 기준을 명시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 FTA는 원산지 인정을 위한 주요 기준으로 세번변경과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나 품목별로 원산지 인정 기준이 큰 차이를 보이며, 협정에 따라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은 역내 경제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동아시아 원산지규정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사누적조항(diagonal cumulation)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유사누적조항은 동아시아의 다양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생산시장 측면에서 사실상의 단일 지역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동아시아지역에 유사누적조항을 도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역내 각 회원국들이 여기에 다양한 의견을 가질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아시아 역내국가들이 지역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동아시아 FTA가 역내국간에 공통의 목표가 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유사누적조항의 도입은 원산지 조항에 따른 무역 왜곡 효과를 줄일 수 있고, 동아시아지역을 하나의 생산시장으로 통합하여 동아시아 FTA를 향한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FTA의 중간 목표로 고려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우선 각 국가들이 체결한 서비스 및 투자부문 협정의 양허안을 보면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하여 싱가포르의 개방(한국에 대해 95.6%) 정도가 한국(싱가포르에 대해 72.3%)에 비해 컸다. 일본의 싱가포르에 대한 서비스시장 개방도는 68.4%이고, 싱가포르의 일본에 대한 개방도는 66.2%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싱가포르와의 EPA에 있어 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하는 등 수세적인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일본은 말레이시아와의 EPA에서도 구체적 합의(specific commitments) 스케줄에서 어떤 약속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를 제한하였다. 일본은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효과가 상품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현지 자국 기업들의 상품무역과 투자를 지원하고 서비스산업에서의 투자 제한을 제거함으로써 자국 기업들이 동아시아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돕는 데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와의 EPA에서 지적재산권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말레이시아는 자국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개방도가 27.7%(일본에 대해)로 4개국 중 가장 낮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3개 항목을 공통으로 유보하고, 62개의 항목을 공통으로 양허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무역 및 투자 촉진(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은 사실 FTA에서 중요한 항목은 아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와 같이 국가간 경제력 및 산업수준 격차가 큰 곳에서는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수단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FTA, 일·싱가포르 EPA 그리고 일·말레이시아 EPA에서는 상호간 무역 및 서비스 촉진을 위

한 수단들이 비교적 한·싱가포르 FTA보다 더 많이 보장되고 있다. 이는 AFTA가 경제협력의 개념으로 상호 FTA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고, 일본 역시 FTA 대상국을 경제협력 개념으로 접근하여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향후 EAFTA 추진을 위해서라도 무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수단들을 확대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발협력의 경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동아시아국가들간의 합의가 거의 없어 뚜렷한 특징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이 부분을 포함시킨 것은 경제력 격차가 큰 동아시아국가들간 FTA에 서는 개발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실현 가능한 동아시아 FTA의 형태 및 방법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 장에서는 동아시아 FTA 형성에 대한 이론적 해석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동아시아 FTA 회원국 및 추진일정도 언급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FTA의 예상 가능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 역내국가간의 양자 FTA와 동아시아 FTA가 병존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형태는 동아시아국가간 정치적 협상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나 스파게티볼(Spaghetti Bowl)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개방수준이 높은 동아시아 FTA를 형성하여 역내 양자간 FTA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국가들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동아시아 FTA 형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내국가간, 양자간 FTA의 추가 체결을 방지하고, 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 상대적으로 유연한 관세양허 구조, 2) 간단하고 개방적인 원산지규정, 3) 보다 강화된 무역 및 투자 제도, 4) 구체적인 개발협력 메커니즘 등이 포함된 동아시아 FTA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본 장에서는 동아시아 FTA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동아시아 FTA 형성에 관한 연구에 있어 선도적이고 보다 심화된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한다. 한편, 한·중·일

FTA 실현에 앞서 동아시아 FTA 형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중국과 일본에 한·중·일 FTA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촉진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한·일 FTA 및 한·중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중·일 FTA는 물론 동아시아 FTA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Global Imbalance and its Implications on East Asian Economies

Doo Yong Yang ed. (2006, 12)

ISBN 978-89-322-1268-5 / A5 / 234면
10,000원

1. 글로벌 불균형과 신흥시장

- 글로벌 불균형의 무질서한 조정(disorderly correction)이 신흥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을 통해서(trade channel)라기보다 대체로 금융을 통해(financial channel) 즉각적으로 이루어짐.
- 이러한 조정을 하는 데 있어 모든 신흥국가가 똑같은 정책적 입장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상태가 양호할 때 조정이 시작된다면 조정과정은 쉬워질 수 있을 것임.
- 미국은 쌍둥이 적자의 근본적인 국내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신흥국가와 더불어 글로벌 불균형 조정에 정책적으로 협력해야 함.

2. 동아시아 국내투자과 대외 불균형

- 1997년부터 1998년의 외환위기 이래, 많은 동아시아국가의 경제는 주로 투자에서의 수익 감소와 금융시장에서의 위험(risk) 증가로 인하여 국내투자 및 경제생산성이 감소되어왔음. 또한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국가의 투자 감소와 미국에서의 민간저축과 공공저축의 감소는 최근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을 심화시킴.

-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은 공공인프라 건설과 인적자원 및 R&D 투자 증가와 같은 동아시아의 국내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조정될 수 있음. 따라서 금융시장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업과 금융부문에서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함.
- 투자를 증가시켜 동아시아의 경상수지 흑자를 감소시킴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글로벌 불균형이 조정함. 또한 미국은 재정을 조정하여 재정적자 수준을 낮춤으로써 글로벌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음.

3. 동아시아 환율제도와 환율균형 이탈(misalignments) 및 상호의존

- 지역적인 상호연관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불균형의 영향을 단순 다국적 거시경제모델(simple multinational macroeconomic model)로 분석함.
- 환율이탈(misalignment)현상과 지역적 통합화 현상은 사실상 1990년대 말 이후 논의되었던 변동 가능한 달러페그정책(flexible dollar peg policy)을 넘어서서 더 발전된 지역적 통화협력의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새롭게 대두될 수 있는 환율이탈을 피하기 위하여 환율의 유연성의 정도(level of flexibility)를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함.
- 원화와 위안화를 비롯한 다른 통화 사이의 안정된 환율 유지는 ACU(Asian Currency Unit) 또는 공동통화 바스켓 체계(common currencies basket system)보다 근본적으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체제임.

4. 동아시아 향후 환율조정: 플라자 합의II는 가능한가?

- 미국의 거대한 경상수지 적자 규모에 대한 80년대 중·후반 미국정부의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미국의 환율조정 정도를 살펴봄.
- 또한 플라자 합의(Plaza Accord)이후 엔화의 지나친 절상으로 인하여 달러가 재조정될 당시 일본의 경제 및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의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동아시아국가의 정책적 방향을 시사하고 있음.

5. 글로벌 불균형과 환율조정: 한국의 경우

-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재조정된다는 점에서 다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를 주로 다루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논점으로 이루어져 있음.
- 첫째, 2006년 한국의 환율 절상은 충분히 대외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뤄졌음. 둘째, 그러나 한·미 두 국가간 경상수지가 균형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다른 아시아 통화의 경직성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대한 압력이 여전히 존재함. 셋째, 따라서 한국에서의 통화절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위안화 또는 일본의 엔화를 실질적으로 절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6. 글로벌 불균형과 환율공조: 한국의 경우

-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아시아에서의 통화협력체제와 환율의 집단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한국의 환율 변동 및 조정을 살펴보고, 동아시아국가들의 외환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 여부와 동아시아의 환율공조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함.



세미나자료 모음

Africa in the World Economy: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Challenges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2006, 4)

ISBN 89-322-1220-1 / A5/396면
12,000원

아프리카경제의 개발 및 성장은 현재 지구상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현안 중의 하나로서, 이와 관련하여 2000년 9월 UN 이사회에서 전 세계 국가 및 개발기구의 합의하에 제창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2015년까지 아프리카경제의 개발을 위한 8개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목표는 아프리카경제에 대해 극빈 탈출, 기초교육의 달성, 남녀차별 철폐, 신생아 조사를 감소 및 임산부 건강 개선, HIV/AIDS으로부터의 안전, 환경문제, 글로벌 경제와의 동반자관계 형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상기 8개 부문의 개발을 위해 매년 5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지원을 비아프리카국가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매년 참가하는 국가는 제공하는 지원의 내용과 이의 성과에 대한 진전 사항을 UN에 보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이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새천년개발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지원방법에 대해 평가하고, 아프리카경제가 이루어내야 할 과제 및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역내 자본시장의 개발과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역내 자본시장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Global Imbalances and the US Debt Problem: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KIEP · FONDAD (2006, 12)

ISBN 89-322-3047-1 / A5/182면
7,000원

본 고는 2006년 2월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네덜란드 외무성에서 개최된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대한 원인과 정책적인 처방을 모색하는 국제세미나 결과물 총 2권 중 제1권이다. 먼저 본 고의 편집자인 얀 요스트 터니슨(Jan Joost Teunissen) FONDAD 대표와 아거 아케르만(Age Akkerman) 이사는 본 고의 저자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다양한 분석과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자간에 상반된 견해도 존재하는 데 대해 큰 환영의 의사를 전했다. 특히 중국의 역할에 대해 기고가들 사이의 견해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 데 주목하고, 이렇듯 다소 상이한 견해가 함께 제시됨으로써 본 고가 전체적으로 균형된 시각을 설정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피력하였다. 또한 여기서 제시된 정책들이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 모든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며 제2권에서 또 다른 견해가 제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본 고를 구성하는 논문들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고의 저자들은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대한 원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통된 의견을 표시하면서도 이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아이켄그린과 박영철(제2장)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글로벌 불균형의 주요원인임을 지적하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미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축을 증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바바라 스

틸링(제3장)은 아이켄그린과 박영철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미국이 과연 이를 이행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 모두 무역적자 감축을 위한 중요한 경제정책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리스타와 그리피스(4장)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의 책임임을 인정하면서도 달러의 국제화로 인해 자국내의 경제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발전하는 데에 주목한다. 이는 미국 이외의 국가가 미국에의 의존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국제적인 움직임이 발생할 때 미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 강(제5장)은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미국이 자국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국내 경제환경에 따라 달러의 공급량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현재의 국제통화체제를 비판하면서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국제통화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안 크레겔(제9장)은 글로벌 불균형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유럽을 포함하여 지나치게 많은 국가들이 수출 주도형 성장정책을 사용하고 있고 생산의 많은 부분이 해외에서 진행되는 반면 국제수지는 국내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유럽과 아시아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이들 국가에 대해 매력적인 시장일 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가 미국 금융시장을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글로벌 불균형과 관련하여 아시아의 역할에 대해서는 먼저 중국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으나 본 고의 저자들은 중국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아이켄그린과 박영철은(제2장)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1/3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중국이 이에 대해 흑자 감소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 특히 국내저축의 감소를 통해 국제수지 흑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으나,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은 미국에 비해 매우 작다고 본다. 판 강(제5장)은 중국이 저축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투자가 지나치게 낮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를 반증하기 위해 산업, 주택,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국내총생산 대비 40%를 초과하며 2003~04년에 투자가 저축을 초

과하거나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인 기간이 11개월을 초과한 점을 제시한다. 드라베크(제7장)는 중국 위안화의 절상은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의 투기성자본의 진입을 감소시켜 중국내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웅 타이 우(제6장)는 중국이 변동환율제로 이전해야 한다는 외국 경제학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자유경제 시장원리는 자유경제하에서 유효하게 작동할 것이므로,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중국의 경우 변동환율제를 실시할 경우에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변동환율제 체제에서 나타나는 수준보다 위안화의 절상수준이 훨씬 높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일본의 역할에 대해 아이켄그린과 박영철은 일본의 경기회복 자체가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이며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시장을 현재의 역외시장 중심에서 동아시아시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오용협(제8장)은 일본의 역할이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동아시아의 통화협력을 위해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한 동아시아 자본의 해외시장을 현재의 미국 시장 중심에서 동아시아 역내 시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글로벌 불균형 문제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역내 금융시장의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다른 아시아국가의 역할에 대해 아이켄그린과 박영철은 동아시아 환율의 절상이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중국이 매우 제한적인 절상기조를 유지하는 한 다른 동아시아국가들도 위안화에 대해 자국통화를 절상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는 또한 아시아에서 통화협력체제가 구축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본다. 판 강은 아시아 통화단위(ACU)의 도입에 대해 유로와 같이 실질적인 통화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아시아국가에 대해 환율을 조정하고 운영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에 중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 고의 주 편집자인 얀 요스트 터니슨은 결론에서 본 고의 내용이 비전

문가들에게도 많이 읽혀지기를 고대하며, 본 고에서 제시된 내용이 글로벌 불균형의 모든 문제와 처방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제학자 및 정책입안자 이외에도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존중되어 글로벌 불균형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는 역설한다.

Emerging Financial Risks in East Asia

Doo Yong Yang ed. (Dec. 2006)

ISBN 978-89-322-3048-1/A5/191면
7,000원

1. 최근 자본이동과 동아시아의 신흥위험

- Session 1에서는 최근 동아시아의 자본이동 추이를 개관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본이탈 가능 위험을 식별·평가하였음.
- 동아시아국가는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동 자산을 선진금융시장의 안전자산에 재투자하고 있음. 반면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선진국의 투자는 위험자산에 집중되어 있어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국가들에는 자본이동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존재함.
- 특히 미국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글로벌 불균형의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고 이를 달러화 약세 혹은 동아시아 통화 강세를 통해서 조정할 때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은 더욱 커질 것임.
- 이러한 배경하에서 오용협 박사(KIEP)는 자본유출(capital outflows) 결정요소에 관해, Yuri Sasaki 교수(Meiji Gakuin Univ.)는 서든스탑(sudden stop: 급작스런 자본유입 멈춤 현상) 우려하에서의 환율제도와 자본유입의 관계를 분석함.
- 오용협 박사는 한국 외환보유액 운용의 다변화 측면과 양적 측면에서, 자본의 해외투자 증대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본의 해외투자(자본유출)를

결정하는 요인(determinants of capital outflows from Korea)을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통해 분석함.

- Yuri Sasaki 교수에 의하면 동아시아국가들은 외환위기 이후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으나 실제로는 de facto 달러 페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이러한 de facto 달러 페그 제도는 통화바스켓 제도나 자유변동환율제도보다 자본유입을 더 초래한다고 분석됨. 그러나 달러 페그 제도 혹은 페그 제도(fixed peg)는 서든스탑 현상에 취약한 환율제도로 분석됨.
- 한편 달러화의 변동성이 감소할 때 동아시아국가로의 자본유입이 증대됨을 제시함.

2. 중국의 새로운 환율제도 도입과 동아시아의 합의

- Session 2에서는 2005년 7월 위안화의 바스켓제도 도입으로 동아시아 통화제도의 변화 가능성과 그 영향을 평가하였음. 특히 동아시아의 외환시장 개입이 자국통화의 절상을 막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 환율제도의 변경이 동아시아국가에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협이 될지 불분명함. 세션 2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가 진행됨.
- 이러한 논의는 결국 글로벌 불균형과 동아시아 정책조정 가능성으로 이어짐.
- 박영철 교수(서울대)는 거시경제변수를 기초할 때 동아시아 8개국 중 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대만이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조정의 여력이 존재함을 제기함.
- 또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동아시아의 환율공조(exchange rate policy coordination), 즉 자국통화의 절상 공조가 중요한 요소이며 공조 가능성 여부를 논의함.

- 중국의 외환제도가 무엇이든 간에 동아시아 통화의 절상 공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위안화의 통화바스켓 제도의 선택은 동아시아국가들의 환율공조의 장을 넓혀 놓은 것으로 평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공조와 관련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포지션에 의존함. 동아시아지역의 주도권을 놓고 경합하고 있는 두 국가의 관계를 볼 때 환율공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됨.
 - 또한 동아시아 통화제도(de facto system)와 다른 일본의 통화제도(free floating system)도 환율공조의 어려운 점으로 지적됨.
- Kentaro Iwatsubo 교수(Hitotsubashi Univ.)는 환율제도 변경과 변동성이 중국과 일본의 무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이 중·일 국제무역에 미치는 충격은 거의 없음을 제시함. 양국의 국제무역은 소폭 및 점진적인 절상보다는 소득수준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함.
 - 한편 중국측 초청인사로 참석한 Zhang Bin 박사(IWEP)는 위안화 환율 절상으로 동아시아국가로부터 중국의 수입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임을 제기하면서, 또한 동아시아 환율공조에 대한 시나리오도 제시함.

3. 동아시아 민간부분의 역할

- Session 3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동아시아국가에 미치는 역효과에 대해 논의함.
- 일반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신흥시장 위기를 촉발했는데, 첫 번째 위험은 미국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해외투자자본을 유인하는 자본의 역이동이 나타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유동성이 감소하고 자국통화 절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하여 신흥시장의 자본변동

(volatility of capital)을 증폭시키는 충격임. 두 번째 위험은 글로벌 금리상승이 글로벌 소비지출을 축소시켜 동아시아 수출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external demand)를 감소시키는 현상임.

- 동아시아국가에서의 투자와 소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금융·자본시장의 취약성을 증폭시킬 수 있음.

■ 이에 이중화 교수(고려대)는 동아시아의 투자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아시아 금융위기가 투자율에 미치는 충격과 외환위기 및 은행위기가 투자율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제시함.

-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성장률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지만 투자 및 투자율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여기에는 주식시장의 요동(surges in real stock market)이 주요 요인이 됨.

- 제시된 위험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험을 낮춰야 하지만, 투자수익률의 지속적인 감소는 성장과 투자에 장기 역효과(long-term adverse effect)를 발생시킴. 또한 확장통화정책이 민간투자수요를 활성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동아시아국가들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민간소비의 활성화가 투자촉진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함.

- 한편 1998년 아시아 위기국 GDP 성장률의 급격한 수축은 주로 투자 붕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함.

■ Naoyuki Yoshino 교수(Keio Univ.)는 동아시아의 포트폴리오 자본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FSA(new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or new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기관 신설을 제시함.

- 동아시아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투자의 home bias 현상(bias towards domestic investment)임. 역내 자본이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를 수집 · 공포하는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기구가 필요함.
-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감독기관으로서의 일반적인 역할(mission)과 자본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단계(step)를 제시함.
- 동아시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다양한 정부채 인수이며, 두 번째 단계는 Public Enterprise Bonds 창설임.



연구자료 / 정책자료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김정곤 (2006. 12)

ISBN 978-89-322-2103-8 / A5 / 82면
5,000원

자격의 상호인정은 전문직 인력의 국가간 이동을 자유화하기 위해 풀어야 할 근본적인 과제이다. 최근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바, 다자협상은 물론 FTA 협상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의료인력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로서 미국과의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은 의료인력 이동의 자유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상호인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간 면허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국가간 제도적 조화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최대 의료인력 수입국의 하나이며 선진적인 의료인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면허관리체계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미국 등 선진국과 의료인력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선결해야 할 과제를 이해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양국의 의료면허 관리체계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대부분의 의료인력 면허 또는 자격증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주별로 분야별 면허원이 존재하여 면허발급 및 인력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우리나라와 미국은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제도에서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시험이 한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의 임상경험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의사 국가시험에 임상시험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3단계의 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임상시험이 반드시 포함된다.

셋째, 미국의 경우 면허갱신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처럼 면허갱신을 의무화하고 있는 근거는 의사와 간호사의 능력은 시험을 일단 통과하면 확인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능력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미국은 외국인 의료인력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는 전문기관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단 이 기관들의 검증절차는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의료인력 유입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으로서 미국과 같은 외국 출신 의료인력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정교화 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상의 비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간의 의료인력 상호인정을 위한 국내 정책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제도적인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분야별로 전문적인 면허원 설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료인력에 대한 면허 발급, 보수교육을 포함한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시작단계에 있다. 직종별로 전문성 있는 기관이 없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상호인정협정 논의시 동등성 판단에서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의 경우 한국간호평가원을 운영 중인데, 고무적인 성과로 판단된다.

둘째, 면허발급 후 사후관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은 의료인력에 대한 면허갱신 및 능력관리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사후관리시스템의 개선은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한 문제이지만, 동시에 국내 의료인력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인력 수급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국가시험을 보다 정교화하는 것도 동등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의사 면허시험에서 실기시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미국의 외국인력에 대한 능력검증시스템

을 면밀히 이해하고 향후 예상되는 해외 의료인력 유입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정교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해외로 나간 국내 의료인력이 기술과 경험을 국내에 전파할 수 있도록 이들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정책 및 제도적 준비를 통하여 우수인력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전문인력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대외경제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근래 미국 등 주요국의 FTA 협정문을 살펴보면 상호인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특정 분야에 대한 내용을 부속서에 추가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선례를 감안하여 우리나라는 향후 FTA 체결시 관심분야를 협정문에 명시하고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대화 창구(작업반 구성 등)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격표준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활발히 참여할 필요가 있다. 상호인정협정은 체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격의 국제표준 수립은 이러한 비용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자격의 국제표준 수립은 국내규정 마련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 그리고 상호인정협정 체결 이외에 비자쿼터제도 등 다양한 경로로 전문인력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이창수 · 김민성 · 윤창인 · 김진오 (2006. 7)

ISBN 89-322-2097-2 / A5 / 122면
7,000원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성장을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 증가, 기업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였으며, NAFTA 이행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한 NAFTA 이행은 장기간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멕시코 기업들의 선진기술 도입, 비용 절감 등을 통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1994년 경제위기 조기극복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는 NAFTA 발효와 함께 발생한 정치적 혼란 및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로 1990년대 중반 실질 GDP 하락, 실업률 증가, 곡물생계농가의 타격 등을 겪었으며 1985년 무역자유화 정책 실시 이후 임금불평등 및 지역간 · 산업간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부정적 현상들이 시간적으로 1994년 이후 발생하였기 때문에 NAFTA에 직접적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구 결과 약화의 원인을 NAFTA에서 찾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멕시코 정책담당자들 역시 NAFTA가 멕시코 경제성장 둔화의 원인이라는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멕시코 경제성장 둔화가 과거 장기적인 수입대체공업화 전략 하에 안주해온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및 공동체 전통 아래 뿌리내린 농업구조 등 역사적으로 고착화되어온 구조적 문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 부재, 세계화된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방정부의 분배정책 한계, 지방정부의 무능 및 부패, 정치·사회적 불안정, 반복적인 경제위기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설명하였다. 또한 미국경제에의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과 달리 멕시코 정책담당자는 경제관계 및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FTA가 아니더라도 미국시장과 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성은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멕시코 정책담당자들은 NAFTA로 인한 멕시코 경제의 긍정적인 효과와 NAFTA 협상 당시 멕시코보다 안정화된 정치·경제·사회 환경, 지리적 차이, 선진화된 기술과 제도 등을 고려해볼 때, NAFTA 이행 직후 멕시코에서 나타났던 각종 부정적 현상이 한국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멕시코와 달리 비현대적 전통부문의 부재 및 소득불평등의 상대적 약화, 제조업 등 기반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 보유, 멕시코와 같은 비효율·저경쟁력의 부실기업 미보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응집력, 높은 수준의 인적 및 R&D 투자 등의 특성이 있어, FTA의 긍정적 효과 실현의 잠재력이 멕시코를 능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멕시코의 경우 FTA 이전 및 이후에 구조적으로 누적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분야와 FTA의 잠재적 이익 실현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내조정정책이 미흡했던 분야에서 부정적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멕시코 경제의 구조적 문제 및 미흡한 국내조정정책으로 인해 무역자유화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멕시코의 NAFTA 사례는 FTA 협상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한 협상 노력을 바탕으로 선진국과의 FTA로 개도국 경제가 겪을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지역균형개발정책, 중소기업지원정책, 사회안전망프로그램 등 FTA 이행과정에서의 피해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구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몽골 경제와 한·몽골 경제협력 확대방향

정재완 · 유민우 (2006. 8)

ISBN 89-322-2098-0 / A5/82면
5,000원

1990년 이후 체제전환과 대외개방을 추진한 몽골 경제는 체제전환 초기 (1990~95년)와 경제 구조조정 가속기(1996~99년)를 거치면서 2000년 이후 안정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몽골 경제는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빠른 개혁 속도와 성과를 보여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이룩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IMF의 평가에 의하면, 몽골은 체제전환국가 가운데 경제적 충격을 비교적 적고 짧게 받았고 회복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으로 체제전환에 성공한 몽골 경제는 풍부한 자연자원, 민간 부문의 성장,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을 배경으로 2000년 이후 성장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2004년에는 모든 산업의 고른 성장과 국제 광물가격의 급상승으로 10.7%라는 사상 최고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몽골 경제는 또한 광대한 영토에 비해 적은 규모의 인구와 경제력, 내륙 국가라는 지정학적 위치, 세계 10대 자원 부국, 재정과 경상수지 등의 적자 지속, 대외의존형 경제, 수준 높은 인적자원 보유, 시장경제 경험 일천, 유목사회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16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종적·문화적·언어적 유사성 및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왔다. 특히 한국 대통령의 두 번째

몽골 방문(2006년 5월 7~10일)은 '선린우호협력을 위한 동반자관계' 구축을 통한 양국 관계의 한 단계 격상, 성공적인 에너지 및 자원 외교 등의 측면에서 큰 의미와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몽골은 한국을 전통적으로 '솔롱고스(무지개 또는 어머니)의 나라'로 인정한 데다가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요 파트너로 인식할 정도로 우호적이다.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경험 때문에 몽골 국민들의 일반 정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예측을 경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대안으로서 일본과 한국이 주요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으나 지리적 근접성과 친밀감 등을

이유로 한국을 더 선호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몽골이 체제전환과 대외 개방 직후 최초로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는 바로 한국이다. 몽골은 또 한국을 자국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아 한국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중요한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관계증진에 적극적이다. 게다가 몽골에는 한류 열풍(한국어 열기, 한국대학 유학 인기)이 지속되고 있고, 또 몽골인에게 한국은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몽골 경제에 대한 SWOT 분석, 몽골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 한국의 장점 등을 통해 본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방향은 한국의 ODA 지원 확대, 몽골의 풍부한 광물자원 개발 참여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인프라 개선 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 농·목축업분야 진출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진출 유망 업종으로는 캐시미어, 광업, 에너지, 인터넷, 통신, 은행, 관광 등을 들 수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발전 현황과 경제협력 확대방안

신현준 (2006. 8)

ISBN 89-322-2099-9 / A5 / 54면
5,000원

카스피해 서안에 위치한 아제르바이잔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경제 및 산업의 침체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으로 2005년에는 사상 최고수준인 26.4%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놀라운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경제성장의 최대 원동력은 카스피해 연안에 매장되어 있는 막대한 석유 및 가스이다.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은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GDP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장기 경제발전전략으로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 및 개발과 함께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첨단 IT 산업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최근의 고성장, 풍부한 에너지자원, 친시장적인 투자환경 등으로 인해 시장성과 성장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2006년 5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을 국민방문하여 정상 회담을 갖는 등 최근 한국에서도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단기적으로는 20%, 중장기적으로는 10%대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낮아 향후 한국의 교역 및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풍부한 석유 및 가스를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일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중동과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물류허브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경제관계는 그 가치에 비해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한·아제르바이잔 교역관계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무역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아제르바이잔 직접투자는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다만 최근 에너지·자원분야 및 통신·IT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향후 양국 경제협력 발전의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아제르바이잔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높은 시장성과 성장성을 가진 신흥시장으로, 국가 차원에서 우수한 수입품 발굴작업, 체계적인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책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교역불균형 해소 및 교역 확대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이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IT, 건설, 운송 등 첨단산업 및 인프라 부문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신흥시장이면서도 시장접근성이 뛰어나 경쟁력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전략적 투자처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기업들이 아제르바이잔에서 기업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투자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아제르바이잔은 정부간 대화 및 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정부간 대화채널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무역 및 투자 보호에 관한 상호협정을 체결하여 한국기업들에 투자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제르바이잔은 한국의 새로운 석유 및 가스 공급원으로 유망하다. 한국이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및 가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일본 선발주자들과 경쟁해야 하며, 아제르바이잔 에너지정책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 고위급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교류가 절실하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한국에 석유 및 가스 개발권을 제공하는 대신, 한국이 자국의 산업 다각화 및 인프라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아제르바이잔과의 경제협력 확대 과정에서 한국은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유·무상 원조 강화, 문화교류 활성화, 경제발전 경험 전수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도를 높이는 장기적인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국 방송산업 현황과 진출전략: TV 시장과 규제를 중심으로

여지나 (2006. 8)

ISBN 89-322-2100-6 / A5 / 60면
5,000원

최근 한류열풍 등으로 프로그램 수출을 포함한 TV 방송산업의 해외진출이 적극 모색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TV 방송산업이 또 하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DDA, FTA 서비스 협상에서 서비스시장 개방 논의가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TV 방송서비스의 교역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활발한 경제·문화적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TV 방송시장을 대상으로 TV 방송제도와 규제에 대한 자세한 현황 파악과 분석을 시도하여 국내 방송산업의 진출전략을 제안하고 향후 한·중FTA 등의 협상 준비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중국은 2002년 12월 WTO 가입 당시의 양허안에 따라 영상산업을 점차 개방하였다. 가장 획기적인 조치는 개방과 관련하여 2003년 12월 광파전영전시총국(廣播電影電視總局)이 중외합자의 영화 제작 및 배급 회사의 설립을 허가한 것이다. 그 이후 2004년 10월 10일에 발표한 「방송프로그램제작 중외합자 및 합작회사 관리규정」(광전총국 44호령)에서 외자가 영화제작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외자 상한을 49%로 정하였다. TV 부문에서는 2004년 11월 28일부터 외국 미디어그룹이 중국내의 방송 TV 프로그램 제작

경영기업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중국 TV 방송프로그램 시장에 대한 합법적 진출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나, 중국측의 지분보유율이 51%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두었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나 다자협상시, 프로그램 제작 시장뿐만 아니라 채널 재송신, 프로그램 공급 및 배급까지 시장개방의 폭을 확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방송시장은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전국 방송인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이 미디어체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중국의 행정단위는 4급, 즉 중앙 행정, 성(省) 행정, 시(市) 행정, 현(縣) 행정으로 나뉘는데, 매스미디어의 체제도 행정조직에 상응하는 4급 미디어체제로 구분하여 중앙 TV 방송국, 성급 위성 TV와 성급 비위성 TV 방송국, 각 성의 수도와 주요 도시의 시급 TV 방송국 그리고 현급 방송국으로 나뉜다. 이러한 중국 방송시장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해 본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중국 미디어체계의 핵심인 중앙의 CCTV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 방송시장에서 성급 위성채널을 위주로 하여 일어나고 있는 지각변동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급 위성채널들은 스스로의 브랜드화를 지향하며 전문화된 TV 방송국으로 각인 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 지역의 방송시장 특성과 상황 파악에 기초한 구체적 시장진입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본고에서 중국의 성급 위성 채널과 시급 채널이 각 성내에서 중앙급 채널과 경쟁하면서 나름의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본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일본의 적대적 M&A 방어지침과 시사점

정성춘 · 이형근 (2006. 9)

ISBN 89-322-2101-4 / A4 / 110면
7,000원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적대적 M&A를 둘러싼 논의가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 문제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로서의 적대적 M&A에 대한 일본정부 대응동향을 소개한다.

한·일 양국은 현재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양국이 안고 있는 공통 과제는 사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M&A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은 국내적 이유에서였다. 버블붕괴 후 본업에서는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과다한 부채로 인한 이자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M&A를 활용하려 한 것이 일본정부의 의도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의 통화위기를 계기로 외자 도입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M&A 시장을 개방하였고, 최근에는 국내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M&A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의도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양국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 방법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적대적 M&A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식이다. 일본정부는 적대적 M&A가 향후 다발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적대적 M&A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을 더욱 중시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과 다른 점은 적대적 M&A에 의한 매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정부는 두 가지 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매수방어책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첫째는 적법성 기준이며 둘째는 합리성 기준이다. 일본기업 중에는 어떤 매수방어책을 도입할 경우 이것이 사후에 위법 판정을 받지 않을까를 우려하여 도입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매수의 증가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본정부는 무엇이 ‘적법한’ 매수방어책인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매수방어책의 도입과 발동은 종업원, 투자자, 지역사회 등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납득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매수방어책의 도입은 이해 관계자들간의 대립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일본정부는 합리성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매수방어책 도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사법당국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일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주예약권 발행이 사업상 필요한 자금조달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는 경우 위법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일본의 판례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러한 사법당국의 판단기준을 ‘기업가치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시사하고 있다. 어떤 매수행위가 기업가치를 향상시키는지의 여부로 매수방어책의 적법성을 판정하는 것이 경제논리적으로 볼 때 더욱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대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매수방어책에 대한 기업사회의 행동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기업 경영자, M&A 관련 법률 및 경제 전문가, 정부 당국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하여 현재 우리나라 M&A 시장의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적대적 M&A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어떠한 상태에 있으며, 또한 우리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수방어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인수·합병이 기업의 경영성과나 혁신, 나아가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으며, 또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외국자본의 활용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이를 저해하는 M&A를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매수방어책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이상에서 우리는 일본의 사례를 고찰하였으나 M&A 시장의 규범과 관련된 미국이나 EU 국가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M&A에 대해 주주의 사가 가장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M&A에 대한 국가적 개입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일견 자유로운 M&A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국가전략에 반하는 M&A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제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각국은 주어진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M&A 시장 규제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국가들의 M&A 정책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선진 각국의 사례 중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당국의 개입에 의해 지침을 제시하는 일본형 모델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M&A 시장 형성에는 부적합할지 모르나 M&A 관련 규범이 미진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적 혹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벤치마크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

Prospects for Regional Financial and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Yung Chul Park and Doo Yong Yang (2006, 10)

ISBN 89-322-2102-2 / A5 / 232면
10,000원

아시아 위기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제 구축을 확대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금융통화협력을 통해 위기 재발 방지 및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을 대표하는 것이 ASEAN+3를 중심으로 한 Chiang Mai Initiative(CMI)와 Asian Bond Market Initiative(ABMI)이다.

CMI는 양자간 스와프 계약을 통해 위기시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전염을 억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CMI는 그 규모가 너무 작고, 결정 메커니즘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더욱이 IMF 자금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나 역내 surveillance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CMI의 효과적 시행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CMI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우선 IMF 비조건부 지원 비중을 10%에서 20%로 확대시켰으며, 양자간 지원규모도 400억 달러에서 79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더욱이 양자간 스와프 거래인 CMI 체제를 다자간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최근 논의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 공동통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논의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율안정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책 이

슈이다. 따라서 최근의 공동환율체제 구축 논의는 단기 또는 중기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논의는 1997년 아시아 위기 이후 아시아 금융개혁의 한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자본시장 인프라의 효과적인 구축을 통한 국내 자본시장 개방화는 국내 자본의 해외 금융상품 수요를 확대하고, 동시에 국내 차입자의 폭넓은 자본 제공을 통해 금융발전을 이끌어내려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러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은 특히 국경간 금융거래를 활성화하여 아시아지역 자본시장의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위한 다양한 시장인프라 개선 및 시장 표준화 등의 논의가 ABMI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다. 따라서 유럽 및 선진국의 금융통화협력의 경험은 아시아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미국과 유럽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이 국제적인 경제안정, 부의 창출과 일치한다면,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더욱 환영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이 아시아 금융시장을 더욱 발전시키고, 아시아경제를 안정시키고 동시에 세계경제의 안정성장에 기여한다면, 이는 지역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KIEP



Working Papers

Investment Stagnation in East Asia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Growth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2006, 4)

ISBN 89-322-4176-7 / A5/128면
7,000원

본 보고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빨라진 동아시아 각국의 생산수렴속도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연구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경우, 1999~2000년의 회복기 이후 2001~03년에 국내 투자수요 감소, 특히 기계류 및 설비 투자수요 감소로 인하여 거시적인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 이에 대하여, 경제위기 이후 투자정체현상의 영구성 여부와 투자의 변동성이 커진 원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부문 모형은 제도적 경직성이 투자 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방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경직성 외에도 투자에 대한 가속도 이론과 비대칭적 조정비용을 포함한 q이론이 검토되었다. 이자율이 경제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회복되지 않은 원인으로서는 장래의 수익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과 조정비용의 증가로 인한 자본에 대한 가역성 감소를 들 수 있다. 또한 금융부문의 개혁 실패 또는 장기화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아직 상존하고 있는 것도 투자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경제외환위기를 경험한 5개의 경제(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와 경험하지 않은 5개의 경제(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를 대상으로 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고 이를 실증분석한 결과, 경제위기를 경험

한 5개의 경제에서는 경제위기를 전후로 투자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경제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5개의 경제에서는 이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한국경제의 실증분석 연구에서는 경제위기를 전후한 1984~2002년 한국경제의 산업별 성장요인을 분석하고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추계하였다. 총산출 성장회계(gross output growth accounting)에 의해 이 기간 한국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을 추계·분석한 결과, 전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0.57%으로 추정되었고 총요소생산성의 총산출 성장기여율은 7.17%로서, 한국경제의 성장은 요소투입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IT)의 발전이 한국의 산업별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산업을 정의하고 이 산업들에서의 생산성 증가 및 생산요소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을 추계하였다. 추계 결과, 정보통신산업은 생산요소의 투입에 의한 성장(input-driven growth)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productivity-based growth)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자본스톡을 비정보통신 산업자본으로부터 분리하여 구분해서 정의하고 이를 기준년접속법을 사용하여 추계하였다. 정보통신 자본은 비정보통신자본과는 달리 그 질적인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질적인 요소를 제거한 후 조화가격모형(Harmonized Price Model)을 사용하여 추계하였다. 정보통신자본은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축적되는 경향을 보였고, 각 부문별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에 큰 차이가 있었음이 발견되었다. 또한 노동생산성 증가를 자본축적에 의한 성장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한 성장으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 산업에 걸친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한정된 산업에만 국한되어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속도와 관련 있는 노동의 이동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의 정책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전 및 기업의 비수도권 분산 등 임의적인 개발정책에 따른 정부지출보다는 투자세액 공제 및 R&D 투자촉진 등을 통한 정부지출 감소와 법인세 감면을 통하여 투자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거시적인 안정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전자산업과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우위를 고려한 투자촉진적인 공급중심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인 안정성과 더불어 기업가정신을 장려하고 정치적인 부패나 혈연, 연고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다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Does FDI Mode of Entry Matter for 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Seong-Bong Lee and Mikyung Yun (2006, 8)

ISBN 89-322-4177-5/A4/42면
2,000원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의 진입유형을 Greenfield, 자산인수(P&A) 및 M&A로 구분하여, 경제적 성과에서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형 구분의 중요한 기준으로 'Buy or Build'가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는 M&A와 Greenfield 투자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외국인투자의 상당 부분은 경제적인 실질면에서는 M&A형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형태로는 Greenfield 형태를 띤 투자사안이다. 이들 투자형태는 소위 '자산인수(Purchase & Assumption: P&A)' 방식이라 부르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자가 기존 국내 기업의 자산 또는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면서 이 기업의 구주 또는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국내기업의 자산 또는营业을 인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분야 101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자산인수방식을 포함하여 3가지 진입 유형으로 투자유형을 구분하고, 이들 유형별로 경제적 성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이들 세 가지 투자 유형으로 구분한 이후에도 경제적 성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투자의 진입유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달리 평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Property and Perspective

Woosik Moon, Yeongseop Rhee and Deokryong Yoon (2006, 10)

ISBN 89-322-4178-3 / A4/48면
2,000원

19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지역통화금융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5월 3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통화단위(RCU) 구성 및 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CMI와 더불어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과정에서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역내 통화단위의 출현은 통화통합과정을 한 단계 전진시킬 뿐만 아니라 실물 통합 촉진, 역내 국민의 심리적 일체감 제고 등을 통해 향후 지역통화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촉매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RCU의 정확한 특성을 이해한 후 역내통화단위의 구성 및 관련된 통화금융협력과정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RCU와 관련된 여러 기술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최근 자료를 이용해 RCU 환율을 추정한 후, RCU 도입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RCU는 역내 국가들의 통화를 각국 경제력을 고려해 가중평균한 바스켓 통화로 정의된다. RCU는 통화통합과정에서 역내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통화단위, 역내 환율안정을 위한 참고자료 및 개입수단, 역내 외환보유 자산 등 여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RCU 출현은 역내 통화금융협력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과거 유럽의 ECU 경험

에 비추어보면 여러 문제점도 아울러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긍정적 측면은 포트폴리오효과로 대변되는 환위험분산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점은 각국 통화의 가치가 변함에 따라 RCU 구성에서 강세통화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약세통화의 비중은 점점 더 작아지는 통화 비중의 쏠림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정국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면 통화금융협력과정에서 비대칭성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비중이 높은 소위 중심국 통화는 RCU의 움직임과 유사하게 움직이게 되고 비중이 낮은 주변국의 통화는 RCU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특히 환율공조를 추진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시 RCU에서 환율이 자주 벗어나는 주변국은 환율안정을 위한 부담을 크게 떠안게 되는, 부담의 비대칭성 문제도 발생한다.

최근의 자료를 이용해 RCU의 달러대비 움직임, 그리고 역내 각국 통화의 RCU 대비 움직임을 추정해보면 이러한 특징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RCU는 달러화에 대해 초기에는 약세 움직임을 보였으나 2002년 이후 현재까지는 강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RCU의 변동성은 대체적으로 개별국 통화의 변동성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 RCU에 대한 개별국 통화의 움직임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역내 통화들간의 가치변동은 최근 5년 동안 최대 35%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비중이 큰 국가들의 통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구체적으로 RCU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중 구성방법, 포함시킬 통화의 수, 기준연도, 비중 재조정 주기 등 추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이와 같은 여러 논제와 위에서 설명한 RCU의 특성 및 유럽에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해볼 때, RCU의 원활한 도입을 통해 통화금융협력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RCU 구성시 특정 통화에 대한 비중이 과도해지는 쏠림현상은 지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ASEAN+3국 중 최대국 비중이 33.3%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경상 GDP, PPP 환산 GDP 등을 이용해 통화구성비를 정하기보다는 역내 무역, 역내 통화금융협력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구성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RCU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 지급결제 수단으로 RCU를 사용하고 또한 민간분야에서의 RCU 사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post-CMI 논의와 직접 연계하여 스와프 통화 및 공공결제에 RCU를 활용하는 것도 장려해야 한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통화통합과정의 일환으로 환율협력을 위한 지원과 RCU 활용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RCU 도입과 더불어 점차 역내 환율협력시스템(Asian Monetary System)을 도입하고 아시아 환율안정기금(Asia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KIEP



APEC Study Series

Cooperation among APEC Member Economie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of Economic and Cultural Perspectives

Hwy-Chang Moon and Min-Young Kim (2006, 11)

ISBN 89-322-0048-3 / A5/66면
5,000원

APEC 회원국들은 회원국간의 경제적 ·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루어간다는 APEC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왔으나, 회원국의 경제 및 문화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상생적 협력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21개 APEC 회원국의 경제적 특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회원국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해 APEC 회원국들간의 관계와 협력방안을 고찰한다. 첫째, 국가경쟁력에 관한 기존 연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출한 포괄적 모델을 통해 APEC 회원국들의 국가경쟁력을 경제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측정 및 분석한다. 둘째, 경제 및 문화적 차원에서 분석한 국가경쟁력을 통해 개별 회원국의 국가경쟁력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국

을 4개의 국가군으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개별 국가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모든 회원국이 상생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협력방안을 도출한다.

APEC 21개 회원국 중 19개국의 자료를 경제적·문화적 차원에서 실증 분석해본 결과, 회원국들간에는 국가경쟁력 구조의 상보성(complementarity)과 국가경쟁력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의 복잡성(complexity)을 바탕으로 한 그룹간 협력(inter-group cooperation)관계와 그룹내 협력(intra-group cooperation)관계가 존재함이 밝혀졌다. 그룹간 협력관계란 상이한 국가그룹내 국가들간에 존재하는 협력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일 그룹내 국가들간에는 경쟁적 관계가 존재하나 상이한 그룹내 국가들간에는 상향 및 하향 협력관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룹간 협력관계는 국가경쟁력 구조의 상보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그룹간 협력을 통해 APEC 회원국들은 개별 회원국이 속한 그룹 이외의 국가들과 협력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한편 그룹내 협력은 동일 국가그룹내 국가들간에 존재하는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동일 국가그룹내 국가들은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소에서 경쟁관계를 보이거나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은 나머지 요소에서는 여전히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러한 그룹내 협력이 가능한 이유는 국가경쟁력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의 복잡성과 이를 토대로 국가들이 국가유사성(country similarity)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APEC 회원국들간의 협력관계는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경제·문화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그룹간 협력과 그룹내 협력관계를 통합함으로써 발전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경쟁력 구조의 상보성과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복잡성은 모든 회원국이 협력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행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논의된 그룹간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거시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개별 국가그룹의 특성을 세밀히 고려해야 한다. 둘째, 그룹내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미시정책은 국가경쟁력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수들간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고찰결과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셋째, 개별 회원국은 자국 고유의 국가경쟁력 구조에 맞추어 상기 거시정책 및 미시정책간의 균형을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 있어 경제 및 문화적 측면의 국가경쟁력에 대하여 동일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함의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APEC 회원국들간의 협력 가능성과 APEC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내향 및 외향 해외직접투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셋째, 개별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과의 협력에 있어 자국만의 고유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점도 다수 도출되었다.

Evaluation of Investment Liberalization Efforts by APEC Economies

Taeho Bark (2006, 11)

ISBN 89-322-0049-1 / A4 / 66면
5,000원

회원국 경제간의 외국인투자 자유화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가 추구하는 주요 목표의 하나다. 무역투자위원회(CTI)는 여러 방면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보다 개방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본 연구는 APEC의 비구속적투자원칙(NBIPs)과 개별실천계획(IAPs)이라는 두 가지 투자정책을 평가함으로써 투자자유화 확대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NBIPs가 양자간 투자 또는 무역협정에 반영되는 수준이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일부 원칙들은 잘 반영된 반면 일부 다른 원칙들은 제대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IAPs를 평가한 결과 역시 인상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회원국 경제의 투자자유화 노력에 대해서는 더 좋지 않은 평가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APEC의 투자자유화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동시에 효과적이지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NBIPs가 개선되어야 하고, 투자자유화를 위한 옵션도 대폭 개선되어야 하며 투자자유화 진전에 대한 평가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KIEP



동북아연구 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김남두 (2006. 4)

ISBN 89-322-5067-7 / A4 / 132면
7,000원

세계적인 지역주의 추세는 한·중·일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FTA가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수산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대응방안, 즉 수산부문 정책과제를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과 세계 최대 수산물 수입국인 일본에 이웃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산부문은 오랫동안의 무역수지 흑자에서 2001년 무역적자로 돌아선 이후 수산물 수출의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수산업 여건 변화와 동북아시아 3국의 국제무역구도 속에서 WTO 체제하의 경쟁심화 추세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전면적인 시장개방이 다가옴에 따라, 국내 수산업은 대폭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한·중·일 3국의 수산업의 국제적·국내적 위상, 그리고 3국의 수산물 교역구조와 경쟁관계를 각각 평가하고 3국의 수산부문 무역장벽을 비교·검토한 후,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를 추정하며, 한·중·일 FTA 추진과 관련된 수산부문의 정책과제를 검토한다.

한·중·일 수산업의 위상

한·중·일의 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추세적으로 빠르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경제발전단계, 즉 공업화와 서비스화의 정도에 따라서

농림어업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03년 기준으로 중국 15%, 한국 3% 및 일본 1%로 나타났다. 2001년 기준으로 어업의 비중은 중국 1.5%, 한국 0.6%, 일본 0.4% 수준이다. 그리고 2001년 기준으로 총인구에 대한 어가인구의 비중은 중국 1.6%, 한국 0.4%, 일본 0.2%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수산업은 농업과 함께 그 비중이 미미하고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여, 무역수지 적자와 시장개방압력을 받고 있는 사양산업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산업구조에서 수산업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수산물 수출국으로서 세계적인 시장개방의 이익이 기대되는 부문으로 평가된다.

한·중·일 수산업의 무역특화

무역특화지수(TSI)를 통하여 HS 6자리 품목 기준으로 한·중·일 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평가해보면, 한국 수산물은 그 이전의 수출특화에서 2001년부터 수입특화로 반전된 후 수입특화가 심화되고 있다. 수산물 무역특화지수는 2000년의 0.04에서 2004년에는 -0.29를 기록하였다. 수출특화를 보인 수산물 품목 수는 2000년 34개에서 2004년에는 24개로 감소하였으며, 반면 같은 기간 수입특화품목은 37개에서 54개로 증가하였다. 수입특화 중에서도 TSI가 -0.80~-1.00에 해당하는 수입특화 Ⅲ그룹, 즉 거의 완전수입특화에 가까운 품목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수산물 무역특화를 보면, 2004년 중 수출특화 9개와 수입특화 79개로 나타났다. 특히 거의 완전 수입특화를 의미하는 TSI -0.80~-1.00에 해당하는 수입특화 Ⅲ의 품목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수출특화 I 그룹의 수출금액이 10억 엔을 넘는 품목은 가리비, 냉동 날개다랑어, 건조어류 등 3개에 불과하며, 수입특화품목은 60개 품목이 10억 엔 이상의 수입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수산물 무역특화는 전반적인 수산물 수출증가 추세와 수산물 무역흑자 증가에서 예상되는 바와 같이 수출특화품목 증가와 수입특화품목 감소로 나타났다. 2004년의 경우 수출특화품목 수가 수입특화품목 수의 거의

두 배에 달하였다. 중국은 냉동 피레트, 조제가공 수산식품 부문과 일부 연체동물과 갑각류의 부문에서 높은 수출특화를 나타냈다. 특히 냉동어류 피레트(14억 달러), 조제 기타 어류(9.2억 달러), 조제새우와 보리새우(5.9억 달러) 조제 기타 연체동물(5.3억 달러) 등 상위 4개 품목의 수출이 34억 달러를 상회하여 중국 수산물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쌍무간 수산물 무역에서의 특화관계

한·일간 수산물 무역에서 한국의 무역특화지수는 2004년의 경우 0.64로서 상당한 정도의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주요 수출특화품목은 눈다랑어, 해초류와 기타 조류, 황다랑어 등이 수출특화 I 그룹에, 그리고 기타 활어와 기타 연체동물이 수출특화 II 그룹에 속하였다. 그 중에서 수출금액이 큰 품목으로는 눈다랑어(1.3억 달러), 기타 활어, 기타 연체동물, 해초류와 기타 조류(7,800만 달러) 등이었으며, 이들을 포함하여 1,000만 달러 이상 수출되는 HS 6자리 품목은 16개에 달하였다.

한·중간 무역에서 한국 수산물의 무역특화지수는 2004년의 경우 -0.76으로 매우 높은 수입특화를 나타냈다. 1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산품목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수출특화 12개 품목 그리고 수입특화 41개 품목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주요 수출특화품목으로는 갑오징어와 오징어 그리고 냉동어류의 간장과 어란뿐이었다. 주요 수입특화품목 중 수입금액이 큰 품목으로는 기타 냉동어류(2.5억 달러), 기타 활어(1.2억 달러) 냉동 계, 문어 등이었다.

중·일간 수산물 무역에서 중국은 2004년의 경우 0.93으로 매우 높은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 혹은 수입 금액이 10만 달러를 상회하는 품목을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은 수출특화 59개 품목 그리고 수입특화 10개 품목을 기록하였다. 한·일간 혹은 한·중간 수산물 무역의 경우 더욱 뚜렷한 무역특화를 보여준다. 중국의 주요 수출특화품목으로는 조제 기타 어류(7.9억 달러) 그리고 조제 연체동물(3.5억 달러), 냉동 피레트(3.4억 달러) 등이 두드러졌으며, 냉동새우와 보리새우, 기타 연체동물 등, 활 뱀장어 등의 수

출금액이 1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한·중·일 수입시장에서의 품목별 경쟁관계

한국의 수산물수입시장에서 50대 품목을 대상으로 일본산과 중국산의 한국시장점유율 추이를 평가하면 일본산 수산물은 절대우위(I) 혹은 우위개선(II) 품목이 매우 적으며, 반면 우위약화(III) 혹은 절대열위(IV)의 품목이 많았다. 특히 절대열위인 일본산 수산물은 상대단가가 상승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의 약화추세가 뚜렷하였다. 반면 중국산 수산물의 경우 절대우위와 우위개선 품목이 32개로서 절대열위와 우위약화 품목 15개의 두 배에 달함으로써, 주요 품목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국산의 경우, 점유율 40% 이상의 절대우위(I)에 있으면서도 상대단가지수가 상승한 (I-1)품목이 13개에 달하였는데, 조기(냉동)와 갈치(냉동) 등 최대수입품목에서 중국산은 상대단가지수가 상승하는 등 강력한 경쟁력을 나타냈으며, 절대우위이면서 상대단가가 하락한 경우(I-2)에도 대체로 상대단가는 미세한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 중국산 수산물의 높은 경쟁력을 보였다.

일본의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주요 품목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절대우위(I)' 그룹에 속하는 품목 수는 한국산은 대구 및 명태 알(조제품)과 기타 어류(활어) 등 11개였으며, 중국산은 12개였다. 중국산의 경우, 특히 눈다랑어, 기타 어류조제품(통조림), 기타 연체류(조제품), 게(조제품) 등 7개의 품목이 일본수입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절대열위(IV)' 그룹으로 구분되는 품목 수는 한국산이 32개 품목이었으며, 중국산은 23개 품목이었다. 중국산 수산물은 2003년의 경우 절대우위에 속하는 품목이 12개에 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상대단가가 상승하고 있는 품목(I-상승)이 8개에 달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의 우위뿐만 아니라 비가격경쟁력도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본수입시장에서 상대단가를 산출할 수 있는 58개 중국산 수산물 중 상대단가지수가 100 미만인 품목이 많았다. 특히 절대우위에 있는 품목의 경우 총 12개 중 8개 품목의 상대단가지수가

100 미만이면서 상대단가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상대단가의 상승과 우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의 경우(Ⅱ-1) 에도 총 11개 품목 중 8개 품목의 상대단가지수가 100 미만이면서 역시 가격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경쟁력 강화의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수산물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수산물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3.3%였으며, 중국의 32개 주요 품목에서는 그 비중이 2.53%로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산 수산물 가격의 단가지수는 165.73으로 나타나 높은 가격의 품목들을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최근 들어 급속히 하락하여, 2004년에는 4.6%를 나타내 1999년의 20.6%의 1/4수준에도 못 미쳤다. 특히 중국의 주요 32개 품목만을 보면 3.39% 수준에 불과하였다. 일본산 수산물로서 중국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이 10%를 넘는 높은 품목으로는 냉동참치(45.71%), 기타 태평양연어(39.20), 냉동보리새우(탈각하지 않은 것)(19.70), 냉동 곱상어 및 상어(14.98), 기타 냉동게(10.88) 등이었다.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수입시장 단가지수는 141.59로서 중국수입의 평균보다 4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산의 165.73보다는 낮았다. 특히 일본산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3개 품목인 냉동참치, 기타 태평양연어, 냉동곱상어의 경우 단가지수가 100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의 수산부문 무역장벽

한국의 수산물 수입관세율은 2~50%까지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전체 수산상품의 64.2%를 차지하고 있는 어류는 3단계(5%, 10%, 20%)의 매우 단순한 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산물에 대한 기본관세율은 가공상태에 따라 활어(10%), 신선·냉장어류(20%), 냉동어류(10%),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20%)으로 균등관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 수산물분야 비관세조치로는 수산물 수입검사제도, 이식용 수산물 검역제도, 원산지표시제도,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등을 들 수 있다.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Prabir DE (2006, 7)

ISBN 89-322-5068-5/A4/62면
5,000원

일반적으로 교역비용은 국가간의 교역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본 논문은 오늘날 동북아의 무역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동북아 무역은 국경내 무역관련 주요 이슈를 비롯한 전통적 관세 메커니즘 관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화의 이동과 관련된 인프라시설에 따른 거래비용의 변동이 동북아의 역내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결론에서 동북아의 관세가 낮아질 경우 역내 무역량이 더욱 확대되어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s in Korea and Japan

Kenya Fujiwara (2006, 11)

ISBN 89-322-5069-3 / A4/46면
2,000원

1990년 말 한국과 일본은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한국은 1997년의 경제위기로, 일본은 1990년대의 부실채권문제로 인해 생긴 거품 경제로, 양국은 이렇게 각기 다른 이유로 구조조정을 시작하였지만, 비슷한 점도 많이 발견된다. 양국에서는 합법적인 파산절차 대신 기업가치 회생 작업 등의 비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파산절차를 거치면서 채무면제와 추가대출이 가능해지자 기업들은 ‘too big to fail’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고, 생존이 불가능했던 기업들은 파산을 미루게 되면서 비판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양국은 대기업의 파산과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법적 파산제도를 개정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조정의 효율성 및 양국간 구조조정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양국의 정성분석모델과 파산기업의 데이터를 통해 구조조정의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 일본의 구조조정은 일반적으로 낮은 유동성과 과도한 합법적 파산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Civil Rehabilitation Act」가 제출된 2000년 이후의 샘플들을 살펴보면 낮은 유동성은 사라지고 합법적 파산절차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구조조정과정에서 합법적 파산 감소와 과도한 합법적 개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것은 기업가치 회생 프로그램의 미비점과 정부개입의 감소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과도한 합법적 파산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대신 2000년도 이전 합법적 파산 감소와 과도한 개편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가 제정되기 이전 기업가치 회생 작업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미진했으며, 합법적으로 파산해야 할 기업을 포함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Korea FTA

Zhang Jianping (2006, 11)

ISBN 89-322-5070-7 / A4/36면
2,000원

중국과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왔으며, 현재 두 나라 모두 양국간 FTA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한·중 FTA는 동북아에서 다자간 경제협력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간의 경제협력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두 나라의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양국간 교역 및 산업보완성의 증가는 한·중 FTA 추진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왔다. Partial Equilibrium Model(PEM)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는 양국 모두에 막대한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한국에는 한·미 FTA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줄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중 FTA 추진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은 농업, 산업공동화, 중소기업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한·중 지정학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중 FTA의 성공 여부는 중국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변화시키기 위한 한국정부 및 각계각층 전문가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중국과 한국정부는 한·중 FTA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본 협상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만약 일본이 현재의 정치적 태도를 고집한다면 한·중 FTA은 한·미 FTA 체결에 이어 예상보다 빨리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KIEP



지역연구시리즈 /
지역리포트 /
지역연구회시리즈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의 성공조건: 제도적 접근

김세원 · 박명호 · 김흥종 (2006, 12)

ISBN 978-89-322-6090-7 / A4 / 192면
7,000원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지역내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위한 접근방법을 제안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의 제기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의 본질이 무엇이며 통상적인 FTA가 과연 동아시아 시장통합의 발전에 적절한 형태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적통화이론을 배경으로 한 많은 연구가 지적해듯이 동아시아 역내 국가간에 거시경제변수들이 수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통합의 추진은 부진한가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내 대다수 국가들이 EAFTA 안(案)에 대해 적극성을 띠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만큼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역내에서는 먼저 시장통합의 추진에 지장을 주는 장애요인들부터 어느 정도 해결하는 주장이 아직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중요한 예로 민족주의, 안보불안, 과거 갈등의 해소, 중국과 일본간 패권경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요인들은 속성상 깨끗이 해결될 수는 없다. 오히려 순서를 바꾸어 ‘평화와 안정’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다면 경제통합의 추진은 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평화의 정착과 함께 경제적 이득이 경제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필요성’이다. 동아시아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역내에서는 물론 역외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다른 어떤 목표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경제우선주의적, 시장주도적, 실리주의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동아시아지역은 세계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역내 국가간 격차가 큰 경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체가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역내 자본 및 기술 이동 증대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관련국들 모두가 이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적절한 형태의 경제 협력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다.

동아시아국가들은 이미 자연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예로 역내 부품, 소재를 비롯한 중간재의 무역은 국가간 생산네트워크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핵심요인이다. 역내 생산분할(production fragmentation)은 각국이 갖고 있는 기술을 포함하는 요소부존, 경영전략 및 경영기법 등의 차이를 배경으로 하는 비교우위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은 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상(de facto)의 시장통합’을 제도화함으로써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안정적인 여건을 마련해주고 더 큰 이득을 얻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동아시아 시장통합이 역외국가에 대해, 그리고 국제적으로 갖는 가장 큰 이점 중의 하나는 EU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외협상력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협상권의 제고는 동아시아가 국제경제관계에서 유리하게 협상을 전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아시아가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으로 미루어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한다면 EU 및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성장축을 이루게 된다.

이와는 달리 동아시아 시장통합에 따르는 제일 큰 비용은 참여국의 경제주권에 대한 제약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주권에 대한 제약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시장통합도 가능하지 않다. 동아시아에서 주권은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다. 따라서 시장통합의 추진 초기에는 경제협력의 확대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회원국의 경제주권을 존중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더하여 역내 무역자유화에 따르는 산업구조조정비용을 들 수 있다.

이 자체는 초기에는 비용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통합이 가져오는 이점이다. EA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회원국간 밀접한 경제협력을 통해 역내 산업구조조정을 도울 수 있는 다자적(multilateral) 지원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동아시아와 같이 회원국간 경제적 격차가 큰 지역에 있어서는 경쟁의 활성화가 가져오는 충격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편, 동아시아국가들은 비록 뒤늦게 지역주의를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했지만 이제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최단시일내 가장 많은 FTA를 체결했다는 기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외견상 FTA의 형태를 띤 이러한 협정들이 과연 실제로 무역확대에 기여할 것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다시 말해 그 '실효성'이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FTA는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며, 일종의 특혜협정(preferential arrangement) 수준을 넘지 못한다. 또 거의 전부가 WTO-plus의 성격을 띤다. 한마디로 동아시아내 FTA는 회원국들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이해, 특히 외교전략적인 고려의 소산이라는 인상을 더 많이 준다.

FTA가 영·미 계통의 실리주의적 전통을 반영하여 여러 이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동아시아내 복잡하게 얽힌 FTA 지도(map)는 원만한 국제분업의 진행을 저해할 수 있다. 국가간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 다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내 각 FTA마다 서로 다른 내용의 예외규정들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지역별로 무역분할(trade segmentation)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시장왜곡(market distortion)을 가져온다. 차선이론(second-best theory)이 우려하듯이 FTA의 확산이 WTO 체제에 의한 다자주의에 비해 관련국들의 후생을 낮추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시장통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선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또는 경제동맹 등은 각각 독립적인 형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다면 '연속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른바 '진화론적 접근'이 요구되는데, 예로 자유무역지역을 든다면,

단계별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장통합을 심화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중도에 머무르기는 어려우며, 결국 시장통합을 포기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마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동아시아가 EAFTA를 추진한다면 현재의 여건을 기초로 이러한 시장통합의 진화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시장통합은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된다.

동아시아가 시장통합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아시아 경제협력기구(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가칭)와 같은 다자적 협력의 테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테두리내에서 본격적인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추진하기 이전에 일정한 준비기간(예로 5년) 동안 회원국간 밀도 높은 경제협력을 전개함으로써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모임(like-minded nations forum)’을 다져야 한다. 경제협력은 크게 두 가지 취지를 갖는다. 하나는 회원국간 정책·제도적 조정과 접근을 통해 상호 경제운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역내에서 시장경제가 뿌리를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역내에서 다지원체제(multilateral assistance system)를 확립하는 작업으로써, 예를 들어 개발은행 및 다양한 구조조정기금들을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동아시아내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공동체의식을 키워 나갈 수 있다. 과거 유럽경제협력기구(ex-OEEC: OECD의 전신)의 역할, EU의 공동지역정책의 취지 및 EU 가입 준비과정에서의 EU-중·동유럽간 긴밀한 협력 등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동아시아 시장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역내에서 복잡하게 얽힌 FTA 지도를 단순화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동아시아경제협력기구내에서 동북아 3국이 FTA를 체결한 후에 동북아 FTA와 AFTA 사이에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초기에는 EAFTA 대상국들을 13개국(동북아 3국+ASEAN 10국)으로 제한하지만 시장통합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점차 확대할 수 있다. 또 여건상 단기간내에 회원국이 될 수 없는 역내 국가들은 일정기간 준(準)회원국(associated member country)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EAFТА는 미국 및 EU지역과는 다자적인 차원에서 또 다른 형태의 FTA를 체결할 수 있다.

EAFТА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FTA와는 달리 내용면에서 ‘시장통합적’이어야 한다. 특히 최소한의 필요한 제도적·기구적 모습을 갖추 필요가 있다. 예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의 설치는 불가피하다. 이 기구는 회원국간 정책협력과 조정 또는 접근을 통해 단계별로 역내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취할 수 있다.

물론, 역내 국가들간 경제적 격차로 인해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조건과 속도로 무역자유화를 실현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동아시아가 개도국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EAFТА의 실현은 단계별 일정에 따라 국가군(群, group)별로 차등화 및 다단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국가들은 일정기간 후에 단계별로 선진경제에 합류한다.

시장통합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다. 그 외에 현실적으로는 정치, 외교를 비롯한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한다. 중요한 것은 역내 시장통합이 가져다주는 전반적인 비용과 편익에 대한 동아시아국가들의 판단과 선택이다. 결국 관련국들의 정치적인 결단과 의지에 달렸다.

아프리카 주요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향: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박복영 · 황주성 · 박철형 (2006. 5)

ISBN 89-322-6087-7 / A4 / 108면
7,000원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이집트, 나이지리아, 알제리 3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우리 국가원수로서는 24년 만에 아프리카를 방문한 것이다.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경제규모도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는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석유를 비롯한 1차산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부 아프리카국가는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잠재적 해외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석유나 가스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아프리카는 우리의 에너지 및 자원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지역이다. 다른 한편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우리는 이제 외교영역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아프리카의 기아와 질병과 같은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치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프리카는 우리에게 한편으로 경제협력 대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원조 대상이기도 하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아프리카내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집트, 알제리, 나이지리아 3개국과 우리와의 경제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하고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제협력분야에는 투자, 무역, 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국의 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유망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가능성과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아프리카 3개국의 최근 경제현황과 경제정책 방향, 자원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집트와는 해외투자, 알제리와는 수출확대 및 에너지자원 개발, 나이지리아와는 에너지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경제협력의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집트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개혁에서 최근 2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집트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개혁 및 기반 마련을 위해 2004년에 투자부를 신설하고, 외국기업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하기 위해 2003년에 노동법을 개정하였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집트는 비교적 넓은 국내시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이집트에 투자할 경우 EU시장 접근이 쉽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에 따르면 기업환경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치적인 안정성도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이집트에 투자할 경우 섬유, 자동차, 정보통신부문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알제리는 북아프리카국가 중 인구가 비교적 많고 시장도 넓은 편이다. 그리고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산업구조도 이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알제리와의 중점협력분야는 교역확대와 에너지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알제리 수입시장은 아프리카국가 중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그리고 알제리는 최근 오일달러로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수입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확대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와 IT제품, 산업용 기계, 철강제품 등이 수출 유망한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유전개발에 대한 알제리의 정책은 다른 산유국에 비해 외국석유기업에 개방적인 편인데, 국영석유회사의 독점적 권한을 축소한 최근의 석유산업 재편은 외국석유회사의 참여를

더욱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해외유전개발에 투자하려는 우리 기업은 알제리의 석유·가스부문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알제리는 지속된 내전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매우 낙후되어 있는 반면, 최근 경제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인프라개발 지원과 유전개발 참여를 연계하여 진출하는 전략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전력 인프라나 IT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나 직업훈련 지원과 같은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것이 에너지분야의 진출을 돕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석유나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외국기업의 에너지개발 참여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개발 참여 가능성도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정부가 석유 및 LNG 생산 확대를 위해 외국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상광구의 분양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참여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주로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해상광구가 개발되는 점, 참여기업에 점점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점, 석유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불안정이 높은 점 등이 투자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The Success Story of Switzerland: How Could Switzerland's Specific Political Institutions Contribute to the Country's Political Stability and Economic Wealth?

Won-hwa Park, Heungchong Kim and Linda MADUZ (2006, 7)

ISBN 89-322-6088-5/A4/74면
5,000원

스위스는 1인당 GDP가 전세계 3위 안에 드는 유럽 강소국의 대표적 국가로서 한국의 소득 3만 달러 달성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국가로 관심을 모아 왔다. 본 보고서는 스위스 정치의 독특한 특징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고 나아가 경제적 번영의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스위스는 각종 이해집단간·지역간 합의적 정치제도(consensus-based political system)가 경제적 약자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함으로써 갈등 구조를 내재화하고 있다. 현대적 국민국가가 성립된 1848년 이후 스위스는 다수결제도 등 다양한 정치체제를 실험해왔으며 현재의 독특한 정치구조는 이러한 역사적 진화의 산물이다. 특히 스위스 정치구조의 합의제, 직접민주주의, 실용주의, 칸톤(canton)의 광범위한 자치, 양원제, 중층적 집권구조 등과, 이러한 특징을 아우르는 정치적 연속성과 상호신뢰가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 정치제도 연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스위스가 자국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정치적 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개선을 거듭해 왔다는 것이다. 스위스의 정치체제가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합리적 의사결정구조가 정치적 안정, 나아가 경제적 번영의 초석이 된 것을 거울삼아, 이를 중간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이뤄내는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

KIEP



단행본

한·미 FTA 바로 알기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5)

B5/58면
비매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 그리고 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과 교역의 확대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우리의 주요 경쟁국들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인도, 러시아 등 거대 신흥개도국들은 우리의 경제를 빠른 속도로 뒤쫓아오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던 미국에서마저도 점점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경제는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돌파구로서 한·미 FTA를 선택하게 되었다.

세계 제일의 선진국이자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우리에게 안정적 수출시장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우리의 경제체질과 구조를 많이 바꾸어 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농업이나 일부 서비스업 등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서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그와 같은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한·미 FTA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적지 않다.

이에 본원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쟁점들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한·미 FTA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이 자료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자료가 일반국민들이 한·미 FTA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6 연구보고서 요약집

2007년 5월 10일 인쇄

2007년 5월 15일 발행

발행인 李景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 쇄 예원기획 전화: 745-8090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